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24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노직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장 동 익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24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노직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장 동 익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편집위원 : 백종현(위원장)

김남두

박찬국

이남인

이태수

정원재

김상현(주간)

발 간 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의 전임연구단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비를 받아 앞서 2년 간(2002.8-2004.7)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실을『철학사상』별책 제2권 제1호~제14호, 별책 제3권 제1호~제25호로 출간한 데 이어, 그 후속으로 다시금 2년 동안(2004.9-2006.8) 「토피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 해 일차로『철학사상』별책 제5권 제1호~제14호를 펴냈다. 이제 이 후속 사업의 두 번째 성과물을『철학사상』별책 제7권 제1호~제25호로 엮어낸다.

이 연구 작업은 중요한 철학 문헌들의 내용을 개념 체계도를 세워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지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지식정보 사회에 있어 철학이 지식 산업과 지식 경제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지식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우리 연구단은 긴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서양의 철학 고전들을 선정하고 이를 연구자의 전공별로 나누어, 각각 먼저 분담한 저작의 개요를 작성한 후, 개념들의 관계를 밝혀 개념 지도를 만들고, 그 틀에 맞춰 주요 개념들을 상술했다. 이 같은 문헌 분석 작업만으로도 대표적인 철학 저술의 독해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작업의 성과물을 디지털화된 철학 텍스트들에 접목시켜 누구나 각자의 수준에서 철학 고전의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철학 고전들은 모두 외국어나 한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식 자원으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앞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원전의 사상을 이루는 개념 체계를 소상히 안다면 원전에 대한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연구 작업의 성과는 일차적으로는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장차 한국어 철학 텍스트들이 확보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 연구 사업의 이 성과물이 인류 사회 문화의 자산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초석이 되고, 한국의 철학 문화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2006년 5월 25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 장 /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연구책임자 백중현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24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노직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장 동 익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머 리 말

본 연구서는 로버트 노직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등장하는 주요 개념과 이들의 연관성을 상하 위계를 통한 토픽 맵 방식으로 분석하여, 철학 지식지도(Philosophy Knowledge Map)를 마련하고자 했다.

노직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가 처음 출판되었던 1970년과 그 이후 1980년대까지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었다. 이 부정적인 평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이 책이 너무도 불쾌한 결론을 함축하고 있어서 정치철학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론이 받아들이기에 치명적인 내용이었어서 이 결론 만으로도 이 책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알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즉 이 책의 결론이 옳다는 것이다.

최근 30년 동안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서는 존 롤즈의 『정의론』과 로버트 노직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가 제기하는 두 대비되는 논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롤즈가 이 책을 통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형식의 입장을 제시한 반면,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 즉 자유 시장 절대적 소유권, 최소국가를 주장하였다. 이런 노직의 주장은 롤즈의 주장보다 현대의 정치적 정신에 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 정치와 긴밀한 연관성이 바로 노직 주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근거가 되고 있다.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는 기지가 번뜩이고 날카로운 예를 통해 전통적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노직의 논변과 결론을 정연하게 파악하여 정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노직은 자신의 주요 논변을 펼치면서 흥미롭기는 하지만 부수적인 주제

를 길게 늘어놓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부수적인 논변과 주된 논변을 구분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논변의 전제들이 여러 지면에 흩어져 있거나 완전히 생략되기 일쑤이다. 조나산 울프의 ‘노직은 자신의 논변을 요약하거나 명료하게 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심지어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도조차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것은 어느 정도 노직이 전체적인 철학적 저작을 제시하려 하기보다 주제들에 대한 철학적 탐색을 한 결과이다’라는 지적을 염두에 두는 것이 노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본 연구서를 통해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개괄과 이를 지탱해 주는 그의 권리 이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직이 무정부주의에 반대하여 최소국가를 옹호하는 논변과 자신이 정의의 소유권 이론이라고 말하는 노직의 정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직이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서는 가능한 한 노직 견해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직 논변의 전제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심지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서를 작성하면서 토픽 맵을 사용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본 연구서의 탐구 방식이 노직 입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에 알맞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염려스러운 것은 노직 입장을 체계적으로 성명하기에 매우 좋은 탐구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나의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잘못되지 않았기를 바랄뿐이다. 또한 노직의 입장과 롤즈의 입장이 일목요연하게 비교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최소국가의 정당화 근거가 유토피아를 위한 골격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논변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차후에 이에 대한 보충을 약속드린다.

본 연구서는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이라는 연구 프로젝트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 프로그램의 목적은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내용을 정보화하여, 철학 지식을 독자가 원하는 수준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것

이다. 즉 철학의 정보화를 통해 대중화를 모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서도 이 연구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 자료에 익숙한 세대들이 보다 손쉽게 철학을 이해하여 철학 지식에 대한 욕구를 싹틔우고, 이를 통해 한층 고양된 지적인 성숙을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서가 나오기 까지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본 연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신 연구원 선생님들의 협조와 연구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고,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백종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많은 연구원들의 의견을 조정하느라 애써주신 김상현 선생님과 디지털 지식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신 최병일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2006년 5월

장동익

목 차

제1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1. 노직의 생애 및 저작	1
1.1 생애 요약	1
1.2 생애 해설	2
1.3 생애 연보	6
1.4 저작	7
1.4.1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7
2.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해제	8
2.1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요약	8
2.2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해설	8
2.3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상세 목차	18
2.4 주요 용어	22
2.4.1 국가	22
2.4.2 자연 상태	22
2.4.3 권리	23
2.4.4 자연권	24
2.4.5 분배적 정의	25
제2부 철학 지식지도	27
1. 철학자 지식지도	27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28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29
3.1 국가	29
3.2 자연상태	30
3.3 권리	31
3.4 자연권	31
3.5 분배적 정의	32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33
3.1 국가	33
3.2 자연상태	34
3.3 권리	35
3.4 자연권	35
3.5 분배적 정의	36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37
 제3부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45
1. 국가	45
1.1 국가 존재의 당위성	46
1.1.1 정치 철학의 근본 문제로서 국가의 존재 여부	49
1.1.1.1 정치철학적 논의의 한 대안으로서 무정부론	49
1.1.1.2 국가 존재 논의를 위한 무정부 상황의 특성	50
1.1.1.3 국가에 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자연 상태론	50
1.2 무정부주의에 대한 논박	52
1.2.1 무정부주의에 대한 논박	53
1.2.2 최소 극대 기준에 의한 무국가 비판	54
1.2.3 최대 극대 기준에 의한 무국가 비판	55
1.3 자연 상태	56
1.3.1 자연 상태에 대한 로크의 설명	56

1.3.2 자연 상태에서 개인적 권리 집행에 의한 분쟁	56
1.3.3 자연 상태에서 분쟁 해결의 어려움	57
1.3.4 자연 상태에서 분쟁 해결책으로서 상호 보호협회 형성	58
1.4 개인의 권리	59
1.4.1 노직과 무정부주의자의 권리에 있어서 공통점	60
1.4.2 권리의 공리주의	60
1.4.3 공리주의자의 권리에 대한 노직의 비판	62
1.4.3.1 행복 극대화에 대한 공리주의자의 해명	63
1.4.3.2 사회를 하나의 실체로 전제하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63
1.4.3.3 개인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64
1.4.4 자연권	65
1.4.4.1 자연권의 두 가지 특성	65
1.4.4.2 자연권에 대한 벤담의 견해	65
1.4.4.3 자연권에 대한 로크의 옹호	66
1.4.4.3.1 군주의 통치권에 대한 필머의 견해	66
1.4.4.3.2 군주의 통치권에 대한 필머의 견해에 대한 로크의 비판	67
1.4.4.3.3 자연권에 대한 제한	67
1.4.4.4 자연권에 대한 칸트주의적 설명	68
1.5 보호 협회	69
1.5.1 보호 협회의 출현	70
1.5.1.1 자연 상태에서 보호 협회로 이행	71
1.5.1.2 자연 상태에 대한 보호 협회의 이점	72
1.5.2 보호 협회의 문제점	73
1.5.2.1 보호 협회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	74
1.5.2.1.1 회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불간섭 정책	74
1.5.2.1.2 회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설정	75
1.5.2.1.3 사적 보복의 권리 포기 요구	75
1.5.3 상업적인 보호 대행사	76
1.5.4 지배적인 보호 협회	77

1.5.4.1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출현	77
1.5.4.1.1 상업적인 보호 대행사에서 지배적인 보호 협회로 이행 ·	77
1.5.4.1.2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출현 방법	78
1.5.4.2 지배적 보호 협회와 국가의 차이점	79
1.4.4.2.1 권력 독점에 있어서 지배적 보호 협회와 국가의 차이점	80
1.4.4.2.1.1 권력 독점과 관련한 지배적 보호 협회의 특징	80
1.4.4.2.1.2 권력 독점과 관련한 국가의 특징	81
1.5.4.2.1.3 처벌에 있어서 지배적인 보호 협회와 국가의 차이점 ·	81
1.5.4.2.1.3.1 처벌과 관련한 국가의 특징	81
1.5.4.2.1.3.1.1 국가의 권력 독점적 특성이 침해되는 두 가지 방식	81
1.5.4.2.1.3.1.2 국가의 독점적 권력 침해에 대한 전면적 처벌 ·	8
1.5.4.2.2.3.1.3 국가 권력 침해에 대한 용서의 권리와 입증 책임	28
1.5.4.2.1.3.2 처벌과 관련한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특징	82
1.5.4.2.2 보호 범위에 있어서 지배적인 보호 협회와 국가의 차이점	83
1.5.4.2.2.1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보호 범위	83
1.5.4.2.2.2 국가의 보호 범위	84
1.6 극소 국가	84
1.6.1 극소국가의 발생	85
1.6.2 극소 국가의 특징	86
1.6.3 극소 국가와 국가의 차이점	86
1.7 최소국가	87
1.7.1 최소국가의 특징	87
1.7.2 최소국가의 재분배적 특징	88
1.7.3 최소국가에서 인정되는 국가의 기능	89
1.7.4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의 국가 거부 이유	89
1.7.5 사적인 정의 집행의 금지	90
1.7.5.1 사적 정의 집행의 절차에 의한 위험 빈도가 높은 경우	91
1.7.5.2 사적 정의 집행의 절차에 의한 위험 빈도가 낮은 경우	91

1.7.5.2.1 위험의 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험적인 행위 상호 제한	91
1.7.5.2.2 무임승차의 문제	92
1.7.5.3 사적인 정의 집행을 금지하는 대가로서 보상	92
1.7.5.3.1 특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충분조건	92
1.7.5.3.2 자발적 동의에 의한 권리 침해	93
1.7.5.3.3 보상이 있음에도 사적인 정의 집행을 금지하는 이유	93
1.7.5.3.3.1 공포로 인한 사적인 정의 집행 금지	94
1.7.5.3.3.1.1 사적 불의와 공적 불의의 구분	95
1.7.5.3.3.1.2 불의가 인정되는 체계에서의 공포	95
1.7.5.3.3.2 사적인 정의 집행을 항상 금지하지 않는 이유	96
1.7.5.3.3.2.1 사적인 정의 집행을 항상 금지하지 않는 이유로서 우발적 사건	96
1.7.5.3.3.2.2 사적인 정의 집행을 항상 금지하지 않는 이유로서 사전 동의 취득의 어려움	96
1.7.5.3.3.2.3 사적인 정의 집행을 항상 금지하지 않는 이유로서 그 행위의 유용성	97
1.7.6 보상의 원리	97
1.7.6.1 간질병 환자의 운전 금지에 대한 보상의 원리 적용	98
1.7.6.2 러시아 룰렛 게임 금지에 대한 보상의 원리 적용	99
1.7.6.3 보상 원리의 타당한 적용	99
1.7.6.4 보상 원리에 대한 반론	100
1.7.6.4.1 보상 원리에 제기되는 반론에 대한 논리의 답변	100
1.7.7 절차적 권리	101
1.7.8 월경에 관한 인지적 원리	102
2. 정의	104
2.1 분배적 정의	104
2.2 소유에 있어서 정의	106
2.2.1 현재 시간 단면원리(중국 상태 원리)	107

2.2.1.1 현재 시간 단면 원리의 한 예로서 공리주의	107
2.2.1.2 현재 시간 단면 원리의 한 예로서 복지 경제학	108
2.2.1.3 현재 시간 단면 원리의 문제점	108
2.2.2 분배의 역사적 원리	109
2.2.2.1 정형적 원리	110
2.2.2.1.1 정형적인 분배	111
2.2.2.1.2 자유에 의한 정형의 파괴	111
2.2.2.1.3 정형 파괴를 꺼려한다는 반론	113
2.2.2.1.3.1 정형 파괴를 꺼려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노직의 비판 ..	113
2.2.2.1.3.2 정형 파괴를 꺼려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노직의 비판에 대한 검토	113
2.2.2.1.4 과도한 이기주의에 의해 유지되는 분배적 정형	115
2.2.2.2 비정형적 원리	115
2.2.2.2.1 하이에크의 비정형적 입장	116
2.2.2.2.2 소유 권리론	116
2.2.2.2.2.1 취득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	117
2.2.2.2.2.2 취득에 관한 로크의 이론	118
2.2.2.2.2.2.1 소유와 무소유를 섞음으로서 기존 소유가 상실된다는 의문	119
2.2.2.2.2.2.2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논변의 의문	120
2.2.2.2.2.2.3 소유 권리를 갖기 위한 로크의 단서의 의미	121
2.2.2.2.2.2.3.1 로크적 단서의 문제점	121
2.2.2.2.2.2.3.2 약한 로크적 단서와 강한 로크적 단서	122
2.2.2.2.2.3 이전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	122
2.2.2.2.2.4 교정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	123
2.2.2.2.2.4.1 불의의 교정과 관련한 여러 물음들	123
2.2.2.2.2.4.2 교정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의 함축 사항	124
2.2.2.3 소득세 과세의 강제 노동적 성격	125
2.2.2.3.1 소득세 과세의 강제 노동적 성격에 대한 반대 견해	125

2.2.2.3.2 소득세 과세의 강제 노동적 성격에 대한 반대 견해에 대한 논박	126
참고문헌	128

일 러 두 기

1. 기본 텍스트로는 노직(Robert Nozick)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 A Member of The Perseus Books Group)를 사용하였다.

2. 번역본으로는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남경희역, 문학과 지성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서에 사용된 모든 인용 쪽수는 이 번역본의 쪽수이다.

3. 본 연구서에 인용된 구문은 번역본의 구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필이 필요한 경우 약간의 수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수정하지 않으려 했다.

4. 3부의 각 단락의 맨 앞에 있는 ‘(e 1.1)’ 또는 ‘(q 1.2)’ 등은 철학 지식 지도의 웹 구현을 위한 표시일 뿐, 책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책을 읽을 때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q’는 인용을 의미하고, ‘e’는 해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숫자, 예를 들어 ‘(e 1.1)’은 1장의 첫 번째 단락을 의미하고, ‘(q1.2)’는 제 1장의 두 번째 단락을 의미한다. 그리고 ‘e’와 ‘q’를 통해서 첫 번째 단락은 해설이고, 두 번째 단락은 해설임을 알 수 있다.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노직의 생애 및 저작

1.1 생애 요약

로버트 노직은 1938년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그는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는 대학원 재학 시절 철학적 신동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였다. 특히 소크라테스적 논변술에 재능을 가져, 이를 통해 기존의 철학적 입장을 논파하는 실력을 과시하였다. 대학원 졸업 후에는 결단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독창적이고 큰 잠재력을 가진 철학자로서 주목받게 된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The Normative Theory of Individual Choice”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9년 30세의 젊은 나이로 하버드 대학 철학과 정교수가 되었다. 미국 철학회 동부 지역 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Arts and Sciences의 American Academy 회원이며, British Academy 회원이기도 하다. 노직은 유대문화와 이스라엘의 문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철학적 입장에 충실하기 위해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정부의 연구비를 받지 않고 있다.

노직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는 철학의 영역을 개척하여 넓은 저작으로, 1975년 전국저술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자유주의를 정치 철학의 진지한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시켜, 자유지상주의의 한 견해를 옹호하고, 존 롤즈의 『정의론』에 도전하고 있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직의 또 다른 저서 『철학적 설명』(*Philosophical Explanations*, 1981)은 인식론, 개인적 동일성, 자유의지, 그리고 윤리학 등 전통 철학의 주요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저서이다. *Examined Life*(1989)는 훌륭한 삶의 본성과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합리성의 본성(1993)은 합리적 결정과 합리적 믿음에 관한 이론 중 최고의 저작이다. 보다 최근에 노직은 *Socratic Puzzles*(1997)를 출판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그리고 *Invariances* (2001)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객관적 세계와 불변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개념들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이 책은 과학 철학, 심리 철학, 형이상학, 그리고 윤리학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1.2 생애 해설

로버트 노직은 1938년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그는 콜럼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The Normative Theory of Individual Choice”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9년 30세의 젊은 나이로 하버드 대학 철학과 정교수가 되었다. 대학원 재학 시절 철학적 신동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였다. 특히 소크라테스적 논변술에 재능을 가져, 이를 통해 기존의 철학적 입장을 논파하는 실력을 과시하였다. 대학원 졸업 후에는 결단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독창적이고 큰 잠재력을 가진 철학자로서 주목 받게 된다. 노직은 유대문화와 이스라엘의 문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철학적 입장에 충실하기 위해 채식주의를 실천하였으며,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부의 연구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실천하였다.

1974년에 출판된 노직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는 철학의 영역을 개척하여 넓은 저작으로 노직에

대한 주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 책은 1975년 전국저술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통적인 자유주의를 정치 철학의 진지한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시켜, 자유지상주의의 한 견해를 옹호하고, 존 롤즈의 『정의론』에 도전하고 있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직의 책 『철학적 설명』(*Philosophical Explanations*, 1981)은 인식론, 개인의 동일성, 자유의지, 그리고 윤리학의 기초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Examined Life*(1989)는 훌륭한 삶의 본성과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합리성의 본성(1993)은 합리적 결정과 합리적 믿음에 관한 이론 중 최고의 저작이다. 보다 최근에 노직은 *Socratic Puzzles*(1997)를 출판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그리고 *Invariances*(2001)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객관적 세계와 불변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개념들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이 책은 과학 철학, 심리 철학, 형이상학, 그리고 윤리학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가 주목 받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유는 이 책에서 전개된 구체적 논변들과 반례들의 강력함과 독창성, 그리고 폭넓은 연관성이라 하겠다. 이들 논변들에 의해 노직이 이 책에서 지지하고자 하는 입장 자체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은 소정의 권리들을 가지며 이들은 침해될 수 없다는 로크 이래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국가의 기능은 국민들의 권리 보호, 권리의 대리행사라는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된다는 야경국가론 및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이다. 실상 그가 여기서 논의하는 최소 국가란 19세기의 야경국가와 흡사한 조직체이다. 노직의 이 입장은 미국 내에서 수정 보수주의적 입장이라 불리며 미국 내의 공화당의 정치 이념과 흡사하다. 노직은 어쩌면 구태의연하며 비진취적이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입장에,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는 맹렬히 논박했던 입장에, 강력한 논변을 제시하고 반대 입장에 쉽사리 설명할 수 없는 반례들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런 이유로 해서 많은 보수주의

자들이 그의 저서를 열렬히 환영하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그를 보수주의의 총아라고까지 말하나 실은 노직 자신은 그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길 원치도 않으며 이런 환영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현존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상적인 형태로서의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즉 노직은 이 책을 통해서 기존 질서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이념으로서 자유주의, 개인주의, 개방주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상 노직의 이론은 어떤 평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고도로 이상적인 이론이며, 노직 자신 현대 사회를 결파한 과거의 부정의가 교정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국가 이념과는 반대되는 재분배적 복지 국가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책이 주목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30, 40여 년간 영미 철학계의 주류는 분석철학이었다. 이 분석 철학은 그 날카롭고 철저한 분석을 도구로 하여 개념들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언어의 논리적 구조를 설명하는 데 위력을 발휘하였으나 지나치게 전문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들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근자의 비판이었다. 분석철학은 파괴적, 비판적인 작업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철학자는 자신의 엄밀성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켰으나, 그런 과정에서 현실 세계로부터는 유리되어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건설적인 해답이나 단서도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직의 책은 국가, 정의, 이상국,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 즉 처벌, 절차적 정의, 박애, 보상, 선제공격, 분배, 자발적 교환, 평등, 시기 등등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려 할 때 우리는 분석적인 도구는 치워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인간에 관한 경험과학, 즉 사회학, 역사학, 심리학, 정치학 등을 원용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통념이다. 실상 많은 정치학 서적들이 이런 인접 과학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노직은 우리의 이러한 통념을 깨뜨리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여 위의 제 문제들을 능란하게 다루어 가고 있다. 노

직이 거의 유일하게 도입하고 있는 인접 과학은 실상 경제학뿐이며, 우리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심리적,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전반적으로 노직의 논술 방식은 최근 미국 분석철학계의 논술 방식과 흡사하다. 우리는 그의 저서 도처에서 희한한 상상, 현실적으로는 있을 법하지 않으나 논리적으로는 그럴 듯한 반례들, 험란한 논리 전개를 목도한다. 이 반례의 사용과 생산적 논변의 전개는 최근의 분석적 인식론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우리는 노직의 책을 통해서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분석과 논리라는 도구가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사용되는지를 잘 볼 수 있다. 이 점은 그러나 노직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하다. 노직은 그 논리적인 도구를 현기증 날 정도로 많이 사용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론적인 또는 이상적인 해결을 시도한 듯싶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철학은 철학적인 작업인 한 그 본연의 과제는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볼 때 노직의 순수 이론 지향적인 성향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

노직의 저서의 세 번째 특징은 그의 정의론 — 소유 권리론이라고 기술되는 — 이다. 노직과 함께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있는 존 롤즈는 1971년에 『정의론』이라는 명저를 내어 사회 정의의 기본 원리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사회 조직을 협동의 체계로 보고, 사회의 제 1차적 덕목으로서의 정의의 역할은 이 협동을 통해서 산출되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라 논했다. 그리고 이런 정의의 이념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국가 체제로서 복지 국가를 제창한 바 있다. 롤즈의 이론은 아직도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무수히 많은 찬, 반의 논문들을 낳게 하였으나 그 어느 것도 강력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노직은 그의 저서에서 국가의 기능을 논하면서 롤즈의 정의론에 전혀 비타협적인 도전장을 들이밀고 있다. 노직은 개인들이 소정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사회란 이런 권리를 소유한 개인들이 자발적인 교환을 하는 체계로 파악한다. 따라서

정의란 그 소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 자발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서 우리나라온다고 노직은 주장한다. 노직에 따르면 국가의 기능이란 생산된 재화를 재분배하는 복지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소유한 권리와 재산을 강도,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경찰의 역할이며 이런 최소한의 기능을 지닌, 그가 말하는 최소 국가는 누구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므로 그런 국가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논한다. 더불어 그는 국가는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는 무정부주의의 입장이 옳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롤즈의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노직의 입장이다.

이 책의 네 번째 특징은 이 책이 서방 자유세계, 특히 미국의 정치적인 이념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이의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한국의 독서계에는 상당수의 정치철학 분야의 외서들이 번역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많은 수가 이데올로기 관계 서적이거나 해설서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륙 계통의 저서들이 많은 듯싶다. 노직의 저서가 갖는 의미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치 이념, 즉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개방 사회의 이념을 이론적인 논변을 통해 집중적으로 밀반침하려 한 데 있겠다.(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로버트 노직, 남경희 역, 문학과 지성사, 역자의 말, 412-415)

1.3 생애 연보

- 1938년: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출생.
- 1963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 취득.
- 1968년: 하버드 대학교 교수 취임.
- 1974년: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출판.
- 1981년: 『철학적 설명』 출판.
- 2002년: 위암으로 사망.

1.4 저작

1.4.1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한국어 표준본: 로버트 노직,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1983.

영어 표준본: Robert Nozick ,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1974.

원어 표준본: Robert Nozick ,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1974.

2.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해제

2.1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요약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최소국가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논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는 분배적 정의에 관한 논변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노직은 분배적 정의에 있어서 소유 권리론을 제시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제3부는 최소국가가 개인의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틀로 기능할 수 있다는 논변이 제시되어 있다. 즉 노직은 최소국가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며, 최소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포괄적 국가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포괄적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직은 도덕적으로 유일하게 용인될 수 있는 국가가 여러 다양한 개인의 이상적 열망을 가장 잘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국가라고 주장한다.

2.2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해설

노직은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를 통해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최소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 최소국가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자의 ‘야경국가’와 매우 유사하다. 노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노직은 모든 국가가 부도덕하다는 무정부주의자에 대항하여 최소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포괄적 기능을 가진 국가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최소국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며, 유일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라고 주장한다.

노직의 최소국가의 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 살고 있다.

2단계: 위의 1단계에 있는 개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 협회를 형성한다.

3단계: 제2단계의 협회들은 지역적으로 나뉘어 지게 되고(각 지역에서 지배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극소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이 극소국가에서는 이에 가담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자만이 보호를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4단계: 위의 3단계의 극소국가는 각자의 독립적 영역에 남이 있는 독립인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개인들을 흡수하여 최소국가를 형성한다.

노직의 최소국가론은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고 있다. 자유지상주의는 권리론의 한 극단적 형태로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상정하고서 이를 위반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직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와 동시에 재산에 대한 권리도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이 만든 법이나 관습 또는 계약의 결과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본연적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권리는 사람이나 재산 모두의 공격에 대한 도덕적 금지를 강조하게 된다.

노직은 로크의 자연 상태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난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권리가 항상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권리가 존중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나 법률 집행 기구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먼저 자연 상태에서 보호협회가 성립된다. 이러한 보호협회의 형성 초기에는 권리 이양의 문제와 권리 대행의 문제가 전제되지 않고 상호 권리보호와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해결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 보호협회의 회원 상호간의 보호 요청에 항상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극복하기 위한 자

연적 발전과정으로서 상업적 보호기구가 탄생할 것이다. 사람들은 상호 보호 협회에 가입하여 보호를 받는 대신에 상업적인 보호 기구의 보호 서비스를 구입하게 된다.

이러한 보호 협회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해질 경우 지배적 보호 협회로 발전하게 된다. 이 지배적 보호 협회는 특정 지역 내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적인 보호 기구는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 노직에 의하면 국가는 두 가지의 요건, 즉 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요건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배적인 보호 기구는 이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적인 보호 기구는 외부인으로부터 가해질 수 있는 권리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회원에 대해 부당한 권리 침해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공포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국가 성립 요건 두 가지 중 하나인 권위적 힘의 독점을 갖게 된다. 이것을 극소국가라고 한다. 이 극소국가는 힘의 독점이라는 점에서는 국가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자신의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되지는 못한다.

이러한 극소국가에서 최소국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입하지 않는 독립인들을 국가로 흡수해야 하는데, 노직은 이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 보상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만을 금지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자들은 타인에게 안전을 공급해 줄 목적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이러한 불이익에 대하여 보상 받아야 할 것이다.

노직은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에서 최소국가론을 주장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소유 권리론이다. 자유주의 이론에서 소유의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신체의 주인이 그 누구도 아닌 개인 자신이라는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재산의 소유는 자유주의 이론의 중심 내용을 이룬다. 자유주의의 소유에 대한 혁신적인 생각은 자유주의가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반면 능력

있는 개인이 무한하게 재산 축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극심한 빈부의 차이를 방지할 수 없게 되어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소유의 문제는 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자 가장 심각한 단점이 되기도 한다.

노직의 소유 권리론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유의 문제가 정의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소유의 문제는 분배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물론 소유와 분배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에서 이 두 개념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선 누가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의 문제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어떻게 소유하는지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정의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노직은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로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한편 롤즈는 공정한 상황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의된 내용은 그 자체로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의 주장은 절차적 정의관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정의의 내용에서 두 주장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노직에게는 정당한 소유권이 배타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의로우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고려의 대상이 아닌 반면, 롤즈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개선되는 조건하에서 허용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결국 노직이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배타적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면 롤즈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의 개선을 고려하는 차등분배를 주장한다.

둘째, 노직의 소유 권리론이 분배정의를 밝힘에 있어 역사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분배정의는 구조적으로 재화들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노직은 이것을 정의의 현재시간단면원리라고 부르면서 공리주의가 이 원리를 따르는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말한다. 실제 공리주의는 소유물이 어떻게 취득되고 어떻게 이전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공리주의의 주된 관심은 행복의 극대화이다. 실제 자유주의의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부의 취득에 대한 인정은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시키려는 공리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능력에 따른 부의

취득은 재화의 추구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공리주의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리주의 이론 내에서는 행복의 극대화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이 난점 때문에 공리주의는 자유주의와의 결합에 있어 한계를 보인다.

노직은 소유를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정당한 소유가 성립하려면 소유를 발생시킨 최초의 획득이 정당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소유물의 최초 획득의 문제이다. 노직에 의하면 아무리 현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획득이 정의롭지 않다면 현재의 소유는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최초 획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사유가 성립하는가이다. 인류가 탄생했을 때, 분명 지상의 모든 사물들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결국 지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대상물에 대하여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사유는 대상물에 대한 공유의 감정을 전제할 때 발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누가 어떤 대상물을 사유화하였을 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소유되지 않은 대상물에 대하여 인류가 공동의 발언권을 전제할 때 비로소 사유의 정당화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노직 역시 사적 소유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근거를 찾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사적 소유의 정당화의 근거를 로크의 재산권에 대한 주장과 관련시켜 찾는다. 로크는 정당한 사유가 설립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 하나는 대상물에 적절한 노동을 가하면 소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들 역시 사유할 수 있는 동일한 질의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로크적 단서라고 불리는 것이다. 노직은 이런 로크적 단서와 유사하게, 원초적 획득을 통해 타인의 입장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획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에서 노직의 논변은 로크적 전통에 따라서 자유와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주장한다. 노직에게 있어서 정의는 타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절대적 제약을 포함하고 있다. 아무도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으며,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없고, 또한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갈 수도 없다.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갖는다.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았다면, 이를 교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간단히 말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사람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정당하다.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이루어진 타인을 침해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 정당한 행위를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노직의 이런 주장은 현대의 복지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현대 국가가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결국엔 시민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이런 견해는 또한 정치 철학의 현대적인 이론화와 고전적인 이론화에 대한 극단적인 반론을 포함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공리주의자, 평등주의자, 계약 이론의 다양한 형식들, 그리고 존 롤즈와 같은, 자유주의에 대한 많은 현대의 설명들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노직의 엄격한 제한과 충돌하고 있다.

노직의 정의에 대한 소유 권리론은 세 개의 기초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획득의 원리, 둘째는 이전의 원리, 셋째는 교정의 원리이다. 획득에 있어서 소유 권리론은 각각의 사람들이 앞서 소유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획득하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로 제시되었다. 이 원리는 최초의 획득에 관한 방식을 통제하게 된다. 이전에 있어서 소유 권리론은 이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할 때의 방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리는 타인의 소유물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데, 그 조건은 사람들이 타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고 타인은 합법적으로 소유물을 획득한 경우이다. 처음 두 원리가 침해된 경우에 적절하게 교정하기 위한 요청된 원리가 교정의 원리를 제시한다.

이 세 원리를 핵심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은 사람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고 항상 그 자체 목적으로 존중하라는 칸트주의 이념이다. 노직에 따르면,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것은 사람들이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목적으로 대우받는 것은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칸트주의 이념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 노직은 대답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라도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합리적인 목적 추구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개인들의 합리적 본성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타인이 그 본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울 의무를 갖는다고 말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칸트적인 이념에 따라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공정한 조건, 즉 적절한 재화를 제공하여 잘못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교환 방식을 보장해야하지 않겠는가?

노직은 사람들이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개별자들은 자살을 할 수 있으며, 대가를 받고 스스로를 노예가 될 수도 있다. 칸트에게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 둘 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노직의 또 다른 기초적인 개념은 각자가 자신 스스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로크는 자기 소유가 자기 신체의 소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신의 재산이다. 즉 사람들은 자기 자아와 자아의 활동을 소유한다. 노직에게 있어서 한 사람은 자신의 신체를 소유한다. 그리고 노직은 내가 방해받아서 안 되는 타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했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자처럼 행동한 것이라고 추론한다. 노직은 이런 생각을 재산권을 옹호하는 데에도 적용한다. 인상적인 예를 통해서, 그는 한 집단이 한 사람에게 동의 없이 그의 노동의 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집단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그 사람의 노동의 일정 비율을 할당함으로써 그 사람을 부분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행동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집단을 위해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그 집단이 그 사람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소유했을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노직에 따르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강제 노동이며, 노예화이다. 이것은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금지된다.

노직이 소유 권리론을 누구도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이념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의 견해는 강한 직관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결정적인 문제는 자아 소유와 외적 대상의 소유 사이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나에게서 어떤 것을 가져간 사람은 나의 특정 부분을 가져갔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통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내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면, 나는 여전히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어떤 일은 하지 못할 수 있다. 아마도 세금 부과는 도둑질이며,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금부과는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기 옹호와 같은 정당한 주장을 위한 타인에 대한 통제를 주장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나는 무언가를 되돌려 받음으로써 이 상황을 교정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이것이 타인에 대한 부분적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이것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 소유의 개념은 정의의 원리를 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그런 경우라면, 자기 소유의 개념은 경쟁하는 정의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노직은 또한 그의 소유 권리론을 자유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예로 들고 있는 챔벌린의 경우에서 직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챔벌린은 자신을 좋아하는 관객을 위해 25센트의 추가 비용을 받기로 하고 야구 경기를 하고 있다. 이 돈은 그가 속한 야구팀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가 갖는다. 백만 명의 관객이 그의 경기를 관람했다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25만 달러의 수입을 더 올릴 것이다. 노직은 분배적 정의

의 특정한 개념에 대한 배경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정의가 각자가 사회적 재화를 동등하게 갖고서 출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면, 챔벌린과 그의 관객 그리고 운동선수들 모두는 동일한 재화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챔벌린은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도 25만 달러가 더 많게 된다. 평등주의자는 챔벌린이 벌어들인 돈을 재분배해야할지, 아니면 이전에 의해 생겨난 불평등을 인정해야할지 결정해야만 한다. 노직은 평등주의자들이 딜레마에 봉착했다고 믿었다. 이전을 금지하는 것은 관객이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결과적인 불평등한 분배가 평등과 조화를 이룬다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당혹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평등주의자들은 평등이 자유와 상충한다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분배의 정형을 유지하는 것은 성인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그 정형에 대한 손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삶에 간섭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본다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분배의 정형은 항상 위협받는다. 대조적으로, 분배의 정형이 유지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소유 권리론은 자유와 상충하지 않는다. 노직에 따르면, 이 이론은 정의의 역사적 개념이다. 이 이론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재화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에서 결과 된 모든 것은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 관객은 자신의 돈을 정당하게 소유했고 챔벌린의 경기를 관람하는 데 지불했기 때문에, 그 교환의 결과는 정당하다.

챔벌린의 예는 정형화된 분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에 끊임없이 예견할 수 없는 간섭하고 있는, 국가가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노직은, 예견가능하고 안정한 상황에서 자율적이고 긴 안목에서의 계획을 위해 그 조건을 확립하면서, 사람들이 하나의 정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형 이론가들에 도전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유물을 합법적으로 얻게 되었거나 아무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에서 이들을 합법적으로 획득했을 경우에만, 그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모든 교환은 문제가 되는 소유물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조건에서 합법적이다. 신체의 각 부

분을 제외하고서, 합법적인 소유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따라서 노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아무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앞서서 소유한 적이 없는 것을 합법적으로 획득할 때, 결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제약한다. 그렇다면 합법적 획득에 의해 사람들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은 소유 권리론의 기초가 되는 생각과 상충하지 않는가?

로크는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앞서서 소유된 적이 없었던 것에서 재산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산의 근원은 자신과 타인의 보존을 위한 중요성과 연관되어 있다. 로크는 자유에 이와 동일한 토대를 귀속시키고 있다. 그는 앞서 소유한 적이 없는 것에 노동을 첨가함으로써 이로부터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철학자들은 이런 암시적인 이념을 일정한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은 자신을 사물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서 자아 소유의 권리를 확장한다고 말한다. 다른 학자들은 그것에 노동을 첨가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로크는 또한 획득될 수 있는 것에 제한을 부가하면서, 모든 사람의 필요가 똑 같이 중요하다는 것에 기초해서, 획득한 것을 낭비해서는 안 되며, 타인을 위하여 충분한 양을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직은 로크의 두 번째 단서 조항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일함으로써 소유물을 얻는 것인지 노동을 잃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근거해서 노동을 첨가하여 소유를 얻는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노직은 소유의 정당화나 획득의 근거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이전에 소유된 적이 없는 것을 획득하는 것은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는 한에서 합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달리 말한다면, 애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필요에 의해 구속받는다.

그러나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 이전에 소유된 적이 없는 외적 재화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조항은 이들의 사례에서 침해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획득과 생산적 노력 덕분에

번듯한 삶을 살 기회를 가진 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타인에게 충분하고 좋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함축하는가? 노직은 그의 소유 권리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자본주의 사회는 매우 생산적이어서 후대의 세대들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대답한다.

2.3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상세 목차

제1부 자연 상태론 또는 의도적 노력 없이 어떻게 국가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론

1장 왜 자연 상태 이론인가

- 1절 정치 철학
- 2절 설명적 정치 이론

2장 자연 상태

- 1절 보호 협회들
- 2절 지배적인 보호 협회
- 3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설명
- 4절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국가인가?

3장 도덕적 제약 사항들과 국가

- 1절 최소국가와 극소 국가
- 2절 도덕적 제약 사항들과 도덕적 목표들
- 3절 왜 측면적 제약 사항들이 필요한가?
- 4절 자유주의적 제약 사항들
- 5절 제약 사항들과 동물들
- 6절 경험 기계
- 7절 도덕 이론의 미결정성
- 8절 제약 사항들은 무엇에 기초해 있는가?

9절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

4장 금지, 보상, 그리고 위협

1절 자립인들과 지배적인 보호 대행업소

2절 금지와 보상

3절 왜 대체 금지하는가?

4절 처벌의 보복론과 저지론

5절 교환이익의 분배

6절 두려움과 금지

7절 항상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8절 위협

9절 보상의 원리

10절 생산적 교환

5장 국가

1절 사적인 정의 집행의 금지

2절 공정의 원리

3절 절차적 권리들

4절 지배적 보호 대행 업소는 어떻게 행위 해야 하는가?

5절 사실상의 독점

6절 타인의 보호

7절 국가

8절 국가 성립에 관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설명

6장 국가를 위한 논변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

1절 과정의 중단?

2절 선제공격

3절 과정 속에서의 행위

4절 합법성

5절 모두가 소유하는 처벌권

6절 예방적 억제

제2부 최소 국가를 넘어서

7장 분배적 정의

1절

- 1.1절 소유 권리론
- 1.2절 역사적 원리들과 중국 결과적 원리들
- 1.3절 정형화
- 1.4절 자유가 정형을 뒤집어 놓는 방식
- 1.5절 쉐의 논변
- 1.6절 재분배와 재산권
- 1.7절 취득에 관한 로크의 이론
- 1.8절 단서

2절

- 2.1절 롤즈의 이론
- 2.2절 사회적 협동
- 2.3절 협동의 조건들과 차등의 원칙
- 2.4절 원초적 입장과 중국결과 원리들
- 2.5절 거시와 미시
- 2.6절 자연적 자산과 자의성
- 2.7절 적극적 논변
- 2.8절 소극적 논변
- 2.9절 공유자산

8장 평등, 사기, 착취, 기타

1절 평등

- 2절 기회의 균등
- 3절 자존과 사기
- 4절 의미 있는 작업
- 5절 노동자들에 의한 관리
- 6절 마르크스의 착취 개념

7절 자발적 교환

8절 박애

9절 자신에게 영향 미치는 것에 대한 발언권의 소유

10절 비중립적 국가

11절 어떻게 재분배가 이루어지는가

9장 데모크테시스

1절 일관성과 평행적인 예들

2절 최소 국가 이상의 국가의 도출

3절 가설적 역사들

제3부 유토피아

10장 유토피아를 위한 골격

1절 모형

2절 우리의 세계에 투사된 모형

3절 골격

4절 디자인 장치와 여과 장치

5절 유토피아적 공통 근거로서의 골격

6절 공동체와 국가

7절 변화하는 공동체들

8절 전면적인 공동체들

9절 유토피아적 수단과 목적

10절 유토피아의 운영

11절 유토피아와 최소국가

2.4 주요 용어

2.4.1 국가

노직에게 있어서 정당성을 획득한 국가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야경 국가적 기능을 담당하는 최소 국가이다. 노직의 최소 국가론의 논리적 발전 단계는 4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1단계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다. 2단계: 1단계에 있는 개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 협회를 형성한다. 3단계: 제2단계의 협회들은 지역적으로 나뉘지게 되고(각 지역에서 지배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국가(*ultramiminal state*)를 형성하게 된다(이 극소국가에서는 이에 가담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자만이 보호를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4단계: 위의 3단계의 극소국가는 각자의 독립적 영역에 남아 있는 독립인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개인들을 흡수하여 최소국가를 형성한다.(Fishikin, *The Dialogue of Justice*, p71) 이렇게 형성된 국가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는 권력 사용의 독점이고, 둘째는 그 지역의 모든 거주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제공이다. 국가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회원들에 대한 권리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은 처벌하겠다고 공헌하는데, 이때 권력 사용 권한의 독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권력 사용 권한의 독점에 의해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는 관할권 내에 있는 독립인들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국가라고 할 수 있다.

2.4.2 자연 상태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들은 “자연의 법의 경계 안에서는, 어느 타인의 허락을 얻거나 그의 의지에 의존함이 없이,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자신들의 행위를 결정하고 그들의 소유물들이나 사람들을 처리할 완전한 자유의 상태 속에 있다.” (§4) 자연의 법의 경계는 “어느 누구도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있어 그를 해하지 말도록” 요구한다 (§6) 일부 사람들은 이 경계를 넘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 서로를 해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와 같은 권리의 침해자들에 대항하여 자신과 타인을 방어할 수 있다. (§3) 해를 입은 쪽과 그의 대리자는 가해자로부터 “그가 받은 손해를 보상할 만큼의 것을 받아낼 수 있다.” (§10); “모든 사람들은 법의 위반을 방지할 정도까지는 그 법의 위반자들을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다.” (§7) 각 사람은 “차분한 이성 과 양심이 명하는 만큼의 벌, 즉 범법자의 범법 행위에 비례하는 벌을 가할 수 있으며, 이 징벌은 보상과 범법 행위의 억제를 위한 것이다.” (§8)(31)

2.4.3 권리

노직은 개인은 삶,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매우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개인은 권리를 가지며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이들 개인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미국의 무정부주의자인 벤자민 투커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벤자민 투커와 같은 무정부주의자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반면에 노직은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벤자민 투커가 개인이 자신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외적인 통제는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면에 노직은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서도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폭력, 절도, 사기, 계약불이행과 같은 것을 보호하는 제한적 기능을 갖는 최소 국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노직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삶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재산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형성할 일반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

다 완벽하게는, 개인은 폭행, 침해, 강제, 사기, 또는 기만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환 또는 상속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소유함으로써, 자유 재산권을 형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노직에게 있어서,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만큼이나 강력하다. 개인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이들 개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권리침해를 하게 된다). 이 권리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폭넓은 것이어서 만약 국가나 그 관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에 관한 주된 우리의 결론은 강요, 절도, 사기, 계약의 강제 등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좁은 기능들에 제한된 최소국가는 정당화되며,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특정의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며, 최소 국가는 옳을 뿐 아니라 고무적이다. 이 결론들의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함축은 일부 시민들로 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또는 국가가 시민들 자신의 선과 보호를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할 의도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4.4 자연권

노직은 우리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권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지닌 것인가? H. L. A. Hart는 자연권의 두 가지 중요한 특성에 관해 말하고 있다. 첫째, 자연권은 “선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어야만 한다. 사람들은 사회의 구성원이거나 각자가 서로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갖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으로서 자연권을 가진다.” 둘째, 자연권은 “사람의 자발적 행위에 의해 만들어 지거나 수여되는 것이 아니다.”(“Are There Any Natural Rights?” in *Theory of Rights*, de. J Waldron, 1984, p.77-78) 따라서 자연권은 법이나 협약에 의해 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와는 무관하게 존재한다. 인간이 자연권을 갖는다는 주장의 일부분은 인간의 법과 협약을 비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2.4.5 분배적 정의

정의 이론들은 분배적 정의의 문제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다루고 있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재화가 정당하게 분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노직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방법이 ‘중립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즉 분배적 정의에 관해 말하는 것은 중심적인 권위자에 의해 정당하게 할당되기를 기다리며 커다란 ‘사회라는 그릇’안에 재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그릇은 없다. 단지 사람들, 사람들의 연합체, 자연 세계, 그리고 사람들이 생산해 낸 것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재화의 생산과 이에 대한 적절한 분배를 분리해서 다룰 수 없다. 사람들이 획득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들이 생산한 것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들이 생산한 것은 거의 이들이 얻고자 기대한 것의 결과이다. 물론, 현재의 재산 소유 상태가 정당한가를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정의가 이 재화를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지를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배적 정의에 관해 계속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회라는 그릇’을 빌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와 다른 정의 이론들에는 모른 척 무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노직이 제시하는 이론을 빠뜨릴 수가 있다. 노직은 경제적 정의는 중심적인 분배적 과정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최소 국가에 의해서도 경제적 정의가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히려 ‘분배적 정의’보다는 ‘소유에 있어서 정의’라고 부를 것을 더 선호한다. 소유 권리론은 정의 이론 중 하나이다. 이것은 소유에 있어서 정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 2 부 철학 지식지도

1. 철학자 지식지도

- 토픽명: 노직
- 토픽 ID: con_nozick
- 상위 토픽명: 서양현대철학자
- 상위 토픽 ID: con_philosopher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이름: Robert Nozick

영어 이름: Robert Nozick

생애 요약: 1부 1.1

외부 어커런스

생애 요약: 1부 1.1

생애 해설: 1부 1.2

생애 연보: <http://www.theihs.org/libertyguide/people.php/75853.html>

인물 사진: <http://www.news.harvard.edu/gazette/2002/01.17/99-nozick.html>

원어 웹사이트: <http://www.iep.utm.edu/n/nozick.htm>

영어 웹사이트: <http://www.iep.utm.edu/n/nozick.htm>

연관 관계

관계된 철학자: 로크(mod_locke), 벤담(mod_bendam)

기여한 철학 분야: 정치철학(con_pol_phil),
윤리학(con_ethics)

기여한 철학 학과:

기여한 철학 이론:

주요 저작: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con_nozick_utopia)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 토픽명: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 토픽 ID: con_nozick_utopia
- 상위 토픽명: 서양현대철학문헌
- 상위 토픽 ID: con_phil_text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제목: Anarchy, States and Utopia

영어 제목: Anarchy, States and Utopia

원전 요약: 1부 2.1

원전 초판 출판년도: 1974

외부 어커런스

원전 요약: 1부 2.1

원전 해설: 1부 2.2

상세 목차: 1부 2.3

책표지 그림:<http://www.amazon.com/gp/product/0465097200/104-6961709-8645505?v=glance&n=283155>

원어 디지털 텍스트:

영어 디지털 텍스트:

한국어 디지털 텍스트:

철학 문헌 내용 토픽맵: con_nozick_utopia_km.xtm

연관 관계

저자: 노직(con_nozick)

관계된 철학자: 로크(mod_locke), 벤담(mod_bendam)

기여한 철학 분야: 정치철학(con_pol_phil)

윤리학(con_ethics)

기여한 철학 학파:

기여한 철학 이론: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3.1 국가

- 토픽명: 국가(국가)
- 토픽 ID: t1
- 상위 토픽명: 국가
- 상위 토픽 ID: t_con_state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state

영어 용어:

한자 표기: 國家

용어 설명: 1부 2.4.1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노직(con_nozick)

사용한 철학 문헌: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con_nozick_utopia)

사용한 내용 토픽: 국가(c1)

3.2 자연상태

- 토픽명: 자연상태(자연상태)
- 토픽 ID: t2
- 상위 토픽명: 자연상태
- 상위 토픽 ID: t_mod_natural_state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natural state

영어 용어:

한자 표기: 自然狀態

용어 설명: 1부 2.4.2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2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노직(con_nozick)

사용한 철학 문헌: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con_nozick_utopia)

사용한 내용 토픽: 자연 상태(c1.3)

3.3 권리

- 토픽명: 권리(권리)
- 토픽 ID: t3
- 상위 토픽명: 권리
- 상위 토픽 ID: t_con_right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right

영어 용어:

한자 표기: 權利

용어 설명: 1부 2.4.3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3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노직(con_nozick)

사용한 철학 문헌: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con_nozick_utopia)

사용한 내용 토픽: 개인의 권리(c1.4)

3.4 자연권

- 토픽명: 자연권(자연권)
- 토픽 ID: t4

- 상위 토픽명: 권리
- 상위 토픽 ID: t_con_right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natural right

영어 용어:

한자 표기: 自然權

용어 설명: 1부 2.4.4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4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노직(con_nozick)

사용한 철학 문헌: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con_nozick_utopia)

사용한 내용 토픽: 자연권(c1.4.4)

3.5 분배적 정의

- 토픽명: 분배적 정의(분배적 정의)
- 토픽 ID: t5
- 상위 토픽명: 정의
- 상위 토픽 ID: t_con_justice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distributive justice

영어 용어:

한자 표기: 分配的 正義

용어 설명: 1부 2.4.5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5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노직(con_nozick)

사용한 철학 문헌: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con_nozick_utopia)

사용한 내용 토픽: 분배적 정의(c2.1)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3.1 국가

- 토픽명: 국가(국가)
- 토픽 ID: t1
- 상위 토픽명: 국가
- 상위 토픽 ID: t_con_state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state

영어 용어:

한자 표기: 國家

용어 설명: 1부 2.4.1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노직(con_nozick)

사용한 철학 문헌: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con_nozick_utopia)

사용한 내용 토픽: 국가(c1)

3.2 자연상태

- 토픽명: 자연상태(자연상태)
- 토픽 ID: t2
- 상위 토픽명: 자연상태
- 상위 토픽 ID: t_con_natural_state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natural state

영어 용어:

한자 표기: 自然狀態

용어 설명: 1부 2.4.2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2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노직(con_nozick)

사용한 철학 문헌: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con_nozick_utopia)

사용한 내용 토픽: 자연 상태(c1.3)

3.3 권리

- 토픽명: 권리(권리)
- 토픽 ID: t3
- 상위 토픽명: 권리
- 상위 토픽 ID: t_con_right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right

영어 용어:

한자 표기: 權利

용어 설명: 1부 2.4.3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3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노직(con_nozick)

사용한 철학 문헌: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con_nozick_utopia)

사용한 내용 토픽: 개인의 권리(c1.4)

3.4 자연권

- 토픽명: 자연권(자연권)

- 토픽 ID: t4
- 상위 토픽명: 권리
- 상위 토픽 ID:t_con_right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natural right

영어 용어:

한자 표기: 自然權

용어 설명: 1부 2.4.4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4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노직(con_nozick)

사용한 철학 문헌: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con_nozick_utopia)

사용한 내용 토픽: 자연권(c1.4.4)

3.5 분배적 정의

- 토픽명: 분배적 정의(분배적 정의)
- 토픽 ID: t5
- 상위 토픽명: 정의
- 상위 토픽 ID: t_con_justice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distributive justice

영어 용어:

한자 표기: 分配的 正義

용어 설명: 1부 2.4.5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5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노직(con_nozick)

사용한 철학 문헌: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con_nozick_utopia)

사용한 내용 토픽: 분배적 정의(c2.1)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1. 국가 (e1.1-2/q1.3)

1.1 국가 존재의 당위성 (e1.1.1 / q1.1.2 / e1.1.3/ q1.1.4
/ e1.1.5)

1.1.1 정치 철학의 근본 문제로서 국가의 존재 여부 (e1.1.1.1)

1.1.1.1 정치철학적 논의의 한 대안으로서 무정부론 (e1.1.1.1.1
/ q1.1.1.1.2)

1.1.1.2 국가 존재 논의를 위한 무정부 상황의 특성 (e1.1.1.2.1
/ q1.1.1.2.2)

1.1.1.3 국가에 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자연 상태론
(e1.1.1.3.1/ q1.1.1.3.2-3)

1.2 무정부주의에 대한 노직의 논박 (e1.2.1-2)

- 1.2.1 무정부주의에 대한 노직의 논박 (e1.2.1.1 / e1.2.1.3
/ q1.2.1.2 / q1.2.1.4)
- 1.2.2 최소 극대 기준에 의한 무국가 비판 (e1.2.2.1 / q1.2.2.2)
- 1.2.3 최대 극대 기준에 의한 무국가 비판 (e1.2.3.1 / q1.2.3.2)
- 1.3 자연 상태
 - 1.3.1 자연 상태에 대한 로크의 설명 (e1.3.1.1 / q1.3.1.2)
 - 1.3.2 자연 상태에서 개인적 권리 집행에 의한 분쟁 (e1.3.2.1
/ q1.3.2.2)
 - 1.3.3 자연 상태에서 분쟁 해결의 어려움 (e1.3.3.1 / q1.3.3.2)
 - 1.3.4 자연 상태에서 분쟁 해결책으로서 상호 보호협회 형성
(e1.3.4.1 / q1.3.4.2)
- 1.4 개인의 권리 (e1.4.1 / q1.4.2)
 - 1.4.1 노직과 무정부주의자의 권리에 있어서 공통점 (e1.4.1.1)
 - 1.4.2 권리의 공리주의 (e1.4.2.1 / q1.4.2.2-3)
 - 1.4.3 공리주의자의 권리에 대한 노직의 비판 (e1.4.3.1)
 - 1.4.3.1 행복 극대화에 대한 공리주의자의 해명 (e1.4.3.1.1)
 - 1.4.3.2 사회를 하나의 실체로 전제하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e1.4.3.2.1)
 - 1.4.3.3 개인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e1.4.3.3.1)
- 1.4.4 자연권
 - 1.4.4.1 자연권의 두 가지 특성 (e1.4.4.1.1)
 - 1.4.4.2 자연권에 대한 벤담의 견해 (e1.4.4.2.1)
 - 1.4.4.3 자연권에 대한 로크의 옹호 (e1.4.4.3.1)
 - 1.4.4.3.1 군주의 통치권에 대한 필머의 견해 (e1.4.4.3.1.1)
 - 1.4.4.3.2 군주의 통치권에 대한 필머의 견해에 대한 로크의
비판 (e1.4.4.3.2.1-2)
 - 1.4.4.3.3 자연권에 대한 제한 (e1.4.4.3.3.1)
 - 1.4.4.4 자연권에 대한 칸트주의적 설명 (e1.4.4.4.1)

/ q1.4.4.4.2-3)

1.5 보호 협회 (e1.5.1)

1.5.1 보호 협회의 출현 (e1.5.1.1-2 / q1.5.1.3)

1.5.1.1 자연 상태에서 보호 협회로 이행 (e1.5.1.1.1
/ q1.5.1.1.2)

1.5.1.2 자연 상태에 대한 보호 협회의 이점 (e1.5.1.2.1)

1.5.2 보호 협회의 문제점 (e1.5.2.1 / q1.5.2.2)

1.5.2.1 보호 협회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 (e1.5.2.1.1)

1.5.2.1.1 회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불간섭 정책
(e1.5.2.1.1.1 / q1.5.2.1.1.2)

1.5.2.1.2 회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설정 (e1.5.2.1.2.1
/ q1.5.2.1.2.2)

1.5.2.1.3 사적 보복의 권리 포기 요구 (q1.5.2.1.3.1)

1.5.3 상업적인 보호 대행사 (e1.5.3.1 / q1.5.3.2)

1.5.4 지배적인 보호 협회

1.5.4.1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출현

1.5.4.1.1 상업적인 보호 대행사에서 지배적인 보호 협회로
이행 (e1.5.4.1.1.1)

1.5.4.1.2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출현 방법 (e1.5.4.1.2.1
/ q1.5.4.1.2.2)

1.4.4.2 지배적 보호 협회와 국가의 차이점 (e1.4.4.2.1
/ q1.4.4.2.2-3)

1.4.4.2.1 권력 독점에 있어서 지배적 보호 협회와 국가의
차이점

1.4.4.2.1.1 권력 독점과 관련한 지배적 보호 협회의 특징
(e1.4.4.2.1.1.1 / q1.4.4.2.1.1.2)

1.4.4.2.1.2 권력 독점과 관련한 국가의 특징
(e1.4.4.2.1.2.1 / q1.4.4.2.1.2.2)

1.5.4.2.1.3 처벌에 있어서 지배적인 보호 협회와 국가의

차이점

1.5.4.2.1.3.1 처벌과 관련한 국가의 특징

1.5.4.2.1.3.1.1 국가의 권력 독점적 특성이 침해되는

두가지 방식 (q1.5.4.2.1.3.1.1.1)

1.5.4.2.1.3.1.2 국가의 독점적 권력 침해에 대한 전면적

처벌 (q1.5.4.2.1.3.1.2.1)

1.5.4.2.2.3.1.3 국가 권력 침해에 대한 용서의 권리와 입증

책임 (q1.5.4.2.2.3.1.3.1)

1.5.4.2.1.3.2 처벌과 관련한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특징

(q1.5.4.2.2.3.1.3.2)

1.5.4.2.2 보호 범위에 있어서 지배적인 보호 협회와 국가의

차이점 (e1.5.4.2.2.1 / q1.5.4.2.2.2)

1.5.4.2.2.1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보호 범위

(q1.5.4.2.2.1.1)

1.5.4.2.2.2 국가의 보호 범위 (q1.5.4.2.2.2.1)

1.6 극소국가 (e1.6.1 / q1.6.2)

1.6.1 극소국가의 발생 (e1.6.1.1)

1.6.2 극소국가의 특징 (e1.6.2.1 / q1.6.2.2)

1.6.3 극소국가와 국가의 차이점 (e1.6.3.1)

1.7 최소국가 (e1.7.1 / q1.7.2)

1.7.1 최소국가의 특징 (q1.7.1.1)

1.7.2 최소국가의 재분배적 특징 (e1.7.2.1 / q1.7.2.2-3)

1.7.3 최소국가에서 인정되는 국가의 기능 (e1.7.3.1 / q1.7.3.2)

1.7.4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의 국가 거부 이유 (q1.7.4.1)

1.7.5 사적인 정의 집행의 금지 (e1.7.5.1 / q1.7.5.2)

1.7.5.1 사적 정의 집행의 절차에 의한 위험 빈도가 높은 경우

(q1.7.5.1.1)

1.7.5.2 사적 정의 집행의 절차에 의한 위험 빈도가 낮은 경우

(e1.7.5.2.1 / q1.7.5.2.2)

- 1.7.5.2.1 위협의 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험적인 행위 상호 제한
(q1.7.5.2.1.1)
- 1.7.5.2.2 무임승차의 문제 (q1.7.5.2.2.1)
- 1.7.5.3 사적인 정의 집행을 금지하는 대가로서 보상
 - 1.7.3.1 특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충분조건 (q1.7.3.1.1)
 - 1.7.5.3.2 자발적 동의에 의한 권리 침해 (q1.7.5.3.2.1)
 - 1.7.5.3.3 보상이 있음에도 사적인 정의 집행을 금지하는 이유
(q1.7.5.3.3.1)
 - 1.7.5.3.3.1 공포로 인한 사적인 정의 집행 금지
(q1.7.5.3.3.1.1)
 - 1.7.5.3.3.1.1 사적 불의와 공적 불의의 구분
(q1.7.5.3.3.1.1.1)
 - 1.7.5.3.3.1.2 불의가 인정되는 체계에서의 공포
(q1.7.5.3.3.1.2.1)
 - 1.7.5.3.3.2 사적인 정의 집행을 항상 금지하지 않는 이유
(q1.7.5.3.3.2.1)
 - 1.7.5.3.3.2.1 사적인 정의 집행을 항상 금지하지 않는
이유로서 우발적 사건 (q1.7.5.3.3.2.1.1)
 - 1.7.5.3.3.2.2 사적인 정의 집행을 항상 금지하지 않는
이유로서 사전 동의 취득의 어려움
(q1.7.5.3.3.2.2.1)
 - 1.7.5.3.3.2.3 사적인 정의 집행을 항상 금지하지 않는
이유로서 그 행위의 유용성 (q1.7.5.3.3.2.3.1)
- 1.7.6 보상의 원리 (e1.7.6.1 / q1.7.6.2)
 - 1.7.6.1 간질병 환자의 운전 금지에 대한 보상의 원리 적용
(e1.7.6.1.1 / q1.7.6.1.2)
 - 1.7.6.2 러시아안 룰렛 게임 금지에 대한 보상의 원리 적용
(q1.7.6.2.1)
 - 1.7.6.3 보상 원리의 타당한 적용 (q1.7.6.3.1)

- 1.7.6.4 보상 원리에 대한 반론 (e1.7.6.4.1 / q1.7.6.4.2)
 - 1.7.6.4.1 보상 원리에 제기되는 반론에 대한 논리의 답변
(q1.7.6.4.1.1)
- 1.7.7 절차적 권리 (e1.7.7.1)
- 1.7.8 월경에 관한 인지적 원리 (e1.7.8.1 / q1.7.8.2)

2. 정의 (e2.1)

- 2.1 분배적 정의 (e2.1.1 / q2.1.2)
- 2.2 소유에 있어서 정의 (e2.2.1 / q2.2.2)
 - 2.2.1 현재 시간 단면원리(중국 상태 원리)
(e2.2.1.1 / q2.2.1.2)
 - 2.2.1.1 현재 시간 단면 원리의 한 예로서 공리주의
(e2.2.1.1.1 / q2.2.1.1.2)
 - 2.2.1.2 현재 시간 단면 원리의 한 예로서 복지 경제학
(q2.2.1.2.1)
 - 2.2.1.3 현재 시간 단면 원리의 문제점 (q2.2.1.3.1)
 - 2.2.2 분배의 역사적 원리 (e2.2.2.1 / q2.2.2.2)
 - 2.2.2.1 정형적 원리 (e2.2.2.1.1 / q2.2.2.1.2)
 - 2.2.2.1.1 정형적인 분배 (q2.2.2.1.1.1)
 - 2.2.2.1.2 자유에 의한 정형의 파괴
(e2.2.2.1.2.1 / (q2.2.2.1.2.2))
 - 2.2.2.1.3 정형 파괴를 꺼려한다는 반론 (e2.2.2.1.3.1)
 - 2.2.2.1.3.1 정형 파괴를 꺼려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리의 비판
(q2.2.2.1.3.1.1)
 - 2.2.2.1.3.2 정형 파괴를 꺼려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리의
비판에 대한 검토 (e2.2.2.1.3.2.1)
 - 2.2.2.1.4 과도한 이기주의에 의해 유지되는 분배적 정형
(q2.2.2.1.4.1)
 - 2.2.2.2 비정형적 원리 (e2.2.2.2.1 / q2.2.2.2.2)

- 2.2.2.2.1 하이에크의 비정형적 입장 (q2.2.2.2.1.1)
- 2.2.2.2.2 소유 권리론 (q2.2.2.2.2.1-3)
 - 2.2.2.2.2.1 취득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
 - (e2.2.2.2.2.1.1 / q2.2.2.2.2.1.2)
 - 2.2.2.2.2.2 취득에 관한 로크의 이론
 - (e2.2.2.2.2.2.1 / q2.2.2.2.2.2.2)
 - 2.2.2.2.2.2.1 소유와 무소유를 섞음으로서 기존 소유가 상실된다는 의문
 - (e2.2.2.2.2.2.1.1 / q2.2.2.2.2.2.1.2)
 - 2.2.2.2.2.2.2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논변의 의문
 - (e2.2.2.2.2.2.2.1 / q2.2.2.2.2.2.2.2)
 - 2.2.2.2.2.2.3 소유 권리를 갖기 위한 로크의 단서의 의미
 - (q2.2.2.2.2.2.3.1)
 - 2.2.2.2.2.2.3.1 로크적 단서의 문제점 (q2.2.2.2.2.2.3.1.1)
 - 2.2.2.2.2.2.3.2 약한 로크적 단서와 강한 로크적 단서
 - (q2.2.2.2.2.2.3.2.1)
 - 2.2.2.2.2.3 이전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 (q2.2.2.2.2.3.1)
 - 2.2.2.2.2.4 교정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 (q2.2.2.2.2.4.1)
 - 2.2.2.2.2.4.1 불의의 교정과 관련한 여러 물음들
 - (e2.2.2.2.2.4.1.1 / q2.2.2.2.2.4.1.2)
 - 2.2.2.2.2.4.2 교정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의 함축 사항
 - (e2.2.2.2.2.4.2.1 / q2.2.2.2.2.4.2.2)
- 2.2.2.3 소득세 과세의 강제 노동적 성격 (q2.2.2.3.1)
 - 2.2.2.3.1 소득세 과세의 강제 노동적 성격에 대한 반대 견해
 - (q2.2.2.3.1.1)
 - 2.2.2.3.2 소득세 과세의 강제 노동적 성격에 대한 반대 견해에 대한 논박 (q2.2.2.3.2.1)

제 3 부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내용 분석 연구

1. 국가

(e1.1) 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국가가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직의 최소국가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야경국가를 의미한다. 최소국가의 기능은 야경국가의 기능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폭력, 절도, 사기, 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에 국한되어 있다. 노직의 최소 국가론은 4단계의 논리적 발전 단계를 거친다. 1단계: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다. 2단계: 1단계에 있는 개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 보호 협회를 형성한다. 3단계: 2단계의 보호 협회들은 극소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3단계는 세부적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보호협회는 보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대행 업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보호 대행 업소들은 지역적으로 나뉘지게 되어 각 지역에서 지배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 지배적인 보호 대행 업소들이 극소국가를 형성하게 며, 이 극소국가에서는 이에 참여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개인만을 보호하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개인은 보호하지 않는다. 4단계: 위의 3단계의 극소국가는 각자의 독립적 영역에 남아 있는 독립인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개인들을 흡수하여 최소국가를 형성한다.

(e1.2) 이렇게 형성된 초소국가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는 권력 사용의 독점이고, 둘째는 그 지역의 모든 거주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제공이다. 국가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회원들에 대한 권리 침해의 위

힘으로부터 자신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은 처벌하겠다고 공언하는데, 이때 권력 사용 권한의 독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권력 사용 권한의 독점에 의해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는 관할권 내에 있는 독립인들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국가라고 할 수 있다.

(q1.3) 우리의 과제는 한 지역 내에서 지배적인 보호 대행 업소가 국가가 되기 위한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시켰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 지역 내에서 힘의 사용에 있어 필요한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 지역 내의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설혹 이 보편적 보호가 오직 재분배적 상식으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이 매우 결정적인 측면은,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가 국가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비난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또 다른 과제는 이 독점과 재분배적 요소가 그 자체 도덕적으로 합법적이었으며, [...]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이는 것이었다. 한 지역 내에서 지배적인 보호 대행 업소는 국가가 되기 위해 그 두 결정적으로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정의 집행 절차를 사용함을 모두에게 유효하게 금지할 수 있는 유일의 금지 집행 기관이며, 이 절차들을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업소는 자신의 영역 내의 고객이 아닌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이는 이 업소가 그 비고객들이 업소의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자의적인 정의 행사 절차를 사용함을 금지하기 때문이며, 이 비고객에 대한 보호 제공은 설혹 이런 보호 제공이 업소의 고객들에 의한 재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해도 주어진다.(147)

1.1 국가 존재의 당위성

(e1.1.1)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자연법에 따라 행위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연 상태의 무정부적 상황은 필경 결점을 가질 것이다. 무정부적 상황의 결점이 국가의 결점보다 더 크다면, 국가가 존재

해야 한다는 주장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특정 국가의 형태가 무정부 상태보다도 더 나으면서, 현실적으로도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 낸다면, 그리고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다.

(q1.1.2)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당위에 따라 행위하리라고 가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 자연 상태의 상황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무정부적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상황의 성격과 결점들을 탐구함은 무정부 상태보다 국가가 더 좋은 가의 문제를 답함에 있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만약 국가 상태가 심지어 이 무정부 상태로서는 최선의 상황, 현실적으로 희망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또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겨날 바, 또는 생겨난다면 현실의 개선일 바 그 최고의 상태보다도 낫다는 점을 보일 수 있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즉 이는 국가를 정당화하리라.(25-26)

(e1.1.3)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연법에 따른다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것이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여, 이를 보전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자신이 끼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하는 징벌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사적이고 개인적인 집행은 끝없는 복수와 보상 행위로 이어질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이런 사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툼이 해결되고 다툼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확고한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q1.1.4) 자연 상태에 있어서 상호 이해된 자연법은 매번의 우발적인 사태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며,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때 사람들은 항상 미심한 점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자신은 옳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해나 손해의 양을 과대평가 할

것이며 걱정은 그들로 하여금 가해자를 과도하게 징벌하려고 시도하고 지나친 보상을 징수하려 시도하게끔 유도할 것이다.(§§13, 124, 125) 이와 같이 해서 한 개인의 권리들(한 개인이 지나친 처벌을 받을 때 침해되는 그러한 권리를 포함해서)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집행은 분쟁으로, 끝없는 복수 행위와 보상 징수 행위의 연속으로 이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툼을 해결하고, 종결지으며, 그리고 양당사자로 하여금 다툼이 끝났음을 알게 할 확고한 방법이 없다. 설사 한쪽이 그의 복수 행위를 그치겠다고 말한다 해도, 상대방은 먼저의 사람이 보상을 취하고 보복을 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며 따라서 기회가 주어지면 그럴 시도를 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지 않음을 알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한 분쟁에 있어 한 개인이 결단코 자신의 몫을 하려는 시도에 있어, 그가 사용할 어떤 방법도 상대방에게 불충분한 확신을 줄 것이다. 분쟁을 그치자는 무언의 협정도 역시 불안정한 것일 것이다. 서로가 불의의 표적이 되었다는 이러한 느낌은, 명명백백히 옳은 편이 있고 쌍방이 서로의 행위의 사실에 관해 동의하는 경우에도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사실과 옳음이 어느 정도 불확실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와 같은 복수의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신의 권리들을 행사할 힘을 결여할 수 있다. 그는 그의 권리들을 침해한 적이 강한 경우 그를 처벌하거나 보상을 받아낼 수 없을 수 있다.(32-33)

(e1.1.5)노직은 사람들은 생명과 자유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절대적인 소유의 권리 또한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권리가 항상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권리가 존중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의 권리는 빈번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무정부 사회에서처럼 국가가 없다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나 법적인 체계가 없을 것이다. 노직은 ‘폭력, 사기, 도둑, 계약 불이행’등에 의해 침해되는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1 정치 철학의 근본 문제로서 국가의 존재 여부

(e1.1.1.1) 정치 철학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단지 편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체제의 국가이어야 하는지, 즉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무정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 철학의 논의는 대안이 되는 이론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무정부론자가 아닌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에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노직은 정치 철학의 근본 문제를 국가가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국가의 성립을 옹호하고 있다. 노직은 무정부주의가 정치 철학 논의의 필연적 결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제한된 기능을 갖는 ‘최소국가’가 정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물론 노직은 이런 논의의 시작점을 ‘자연 상태론’에 두고 있다.

1.1.1.1 정치철학적 논의의 한 대안으로서 무정부론

(e1.1.1.1.1) 정치 철학의 근본 문제는 국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즉 왜 무정부 상태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정치 철학의 근본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그 무정부 상태가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인지가 먼저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가 만족스러운 것이라면, 구태여 국가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무정부 상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의는 국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정부 상태가 어떠한지를 밝혀서 그 상태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q1.1.1.1.2) 정치 철학의 근본 문제는 — 국가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들에 논리적으로 앞서는 — 대체 국가가 있어야 하는

냐는 것이다. 왜 무정부 상태를 취하지 않는가? 무정부론은, 만약 타당하다면, 정치철학의 전 주제를 무의미하게 하므로 정치철학론은 이의 주요 이론적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무정부론이 매력 없는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철학이 여기에서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밖의 사람들도 논의의 귀추에 대해 초조하게 기다릴 것이다.(23-24)

1.1.1.2 국가 존재 논의를 위한 무정부 상황의 특성

(e1.1.1.2.1) 노직은 국가 존재의 당위성을 말하기 위하여 자연 상태에서 정치 철학적 논의가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무정부적인 상황을 먼저 탐구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어떤 무정부 상황을 탐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직은 이때 조사하여야 할 무정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정부 상태는 실질적인 정치 상황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어떤 가능한 정치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즉 노직이 설정하는 무정부 상태는 어떤 다른 정치 상태도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정치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존재한다.

(q1.1.1.2.2) 출발선에서부터 성급하게 내닫는 사람들이나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논변을 통해 출발선으로부터 물러서는 사람이나 똑같이 모두 정치철학의 주제를 자연 상태론에 의해 시작함이 설명적인 목적을 지녔다는 점은 인정하리라. 위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 어떤 무정부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가? 아마도 다른 가능성적 상황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의 정치적 상황도 존재하지 않은 경우의 상태이리라.(24)

1.1.1.3 국가에 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자연 상태론

(e1.1.1.3.1) 노직은 정치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가 국가 존재의 당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국가 존재의 당위에 관한 문제는 국가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문제이다.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당위를

부정하는 하나의 입장, 즉 무정부론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 철학적 논의는 자연 상태론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하는 것이 합당하다. 즉 자연 상태론에 대한 고찰은 국가 존재의 당위에 관한 논의의 시작점인 셈이다. 자연 상태론에 의한 무정부적 상황이 국가 보다 더 좋은 지에 관한 문제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당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가정 될 수 있는 무정부 상태보다도 더 나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상태이면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국가의 출현 가능성을 밝힌다면, 국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q1.1.1.3.2) 政府論者나 無政府論者나, 즉 출발선에서부터 성급하게 내닫는 사람들이나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논변을 통해 출발선으로부터 물러서는 사람이나 똑같이 모두 정치철학의 주제를 자연 상태론에 의해 시작함이 설명적인 목적을 지녔다는 점은 인정하리라.(24)

(q1.1.1.3.3) 보다 중요한 것은 — 특히 어떤 목표들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하는가의 결정을 위하여 —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억제를 행하고 당위에 따라 행위하는 무국가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당위에 따라 행위하리라고 가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 자연 상태의 상황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무정부적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상황의 성격과 결점들을 탐구함은 무정부 상태보다 국가가 더 좋은가의 문제를 답함에 있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만약 국가 상태가 심지어 이 무정부 상태로서는 최선의 상황, 현실적으로 희망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또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겨날 바, 또는 생겨난다면 현실의 개선일 바 그 최고의 상태보다도 낫다는 점을 보일 수 있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즉 이는 국가를 정당화하리라.(25-26)

1.2 무정부주의에 대한 노직의 논박

(e1.2.1) 벤자민 투커(Benjamin Tucker)는 어떤 국가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국가든 개별자들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침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정당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상식적이며, 논증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것이다. 우리의 상식은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견해는 투커의 주장과 전적으로 배치된다.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국가가 정당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논증이 필요 없으며, 국가의 존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면, 단지 국가의 존재는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의 진지한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노직은 국가의 존재에 관한 우리의 상식적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노직은 국가 존재의 정당성에 관해 논증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노직의 이런 견해는 무정부주의를 논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1.2.2) 노직이 설정하는 개인적 무정부주의자는 자기 소유와 개인의 독립성을 전제로 삼고 있다. 개인적 무정부주의자들은 어떤 형태의 국가든 자기 소유와 개인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가는 부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정부주의를 비판하는 노직이 이들의 전제인 자기 소유와 개인의 독립성을 부정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노직은 이런 전제들을 실제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정부주의의 전제들은 노직의 전제들과 동일하다. 그래서 노직에게 있어서 무정부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노직의 무정부주의에 대한 논박은, 무정부주의자와 공유하고 있는 전제 가정들이 모든 형태의 국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공유된 전제에서도 특정한 형태의 국가, 즉 초소국가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보호협회가 지배적인 보호협회를 통해 극소 국가, 최소 국가에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논변이 이에 대한 증명이다.

1.2.1 무정부주의에 대한 노직의 논박

(e1.2.1.1) 노직은 무정부주의를 논박하면서 무국가가 극히 공포스러운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의거하고 있다. 즉 무국가가 극히 공포스러운 것이라면, 무국가의 형태로 나아가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설명은 홉스의 자연 상태를 생각나게 한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산업도 없다. 왜냐하면 그 결실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구상에 문화도 있을 수 없다. 항해술도 없으며, 바다를 통해 수입될 수 있는 상품을 이용할 수도 없다. 커다란 건물도 없다. 움직이는데 많은 힘이 필요한 물건을 움직이고 제거할 수 있는 도구도 있을 수 없다. 지식도 있을 수 없으며, 시간 체계도 있을 수 없다. 예술도, 편지도, 사회도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최악인 것은 공포가 지속되며,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위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 고독하고, 불행하고, 불쾌하고, 야만적이며, 불충분하다.”(홉스, 『리바이어든』(*Leviathan*, [ed]. C. B. Macpherson, 1998, p.186) 자연 상태가 이러하다면, 우리 모두는 틀림없이 이런 상태를 꺼려하게 될 것이다.

(q1.2.1.2)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무국가의 객선에 타고 있다는 불필요한 가정이나 특정의 상황에 이르기 위해 반실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에서 오는 거대한 부담감은 그만 두고라도, 그 상태는 근본적인 이론적 흥미를 결여하고 있다. 분명 그 무국가적 상황이 극히 공포스러운 것이라면, 이는 소정의 국가를 해체하거나 파괴하여 이를 무국가로 지금 바로 대체하길 주저할 이유가 될 것이다.(24)

(e1.2.1.3) 무정부 상태가 너무도 공포스러워서 우리가 꺼려한다면, 그리고 국가가 무정부 상태에서 생겨나는 공포보다는 작은 것이어서, 그리고 그 공포 뒤에 주어질 큰 이익이 있다면, 우리는 국가의 형성을 받아들일 것이다. 노직은 이와 같은 논변을 치과의사에게 진료 받으러 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치과 의사에게 가는 것에 상당한 공포를 느낄 것이지만 가지 않았을 때 닥칠 공포에 비하면, 치과 의사에게 가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인 것은 분명하다. 이를 통해 노직은 무정부 상태보다는 국가가 보다 나은 대안이라고 말한다.

(q1.2.1.4) 보다 소득이 있는 것은 “만약 ~라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을”지도 모를 상황을 포함해서 모든 흥미의 대상이 되는 상황들을 포괄하는 근본적이고 추상적인 기술에 집중하는 것일 것이다. 이 기술이 극히 공포스러운 것이라면, 국가는 보다 나은 대안으로 드러날 것이며 적어도 치과 의사에게 갈 때만큼의 애정을 느낄 수 는 있는 것이라. 그와 같은 공포스런 기술들은 대개 설득력이 없다.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학과 사회학의 주제들은 모든 사회들과 인간들에 걸쳐서 그와 같이 비관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그 이유는 특히 그 학문들의 논변은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관한 그런 비관적인 가정들을 용허하지 않기 때문이다.(24)

1.2.2 최소 극대 기준에 의한 무국가 비판

(e1.2.2.1) 국가와 무정부 상태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최소 극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최소 극대의 기준은 게임 이론상의 하나의 전략 선택 원리로, 게임에 임하는 당사자가 선택 가능한 모든 전략 중에서 가상적으로 각각의 전략을 택했을 때 최악의 결과를 기대하고, 이 최악의 결과들 중에서 그리도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오는 전략을 선택하는 원리이다. 말하자면 무국가 상태보다는 국가 상태 모두 최악의 결과 중에서 최선의 결과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소 극대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국가 상태의 가장 비관적인 결과와 흡스적 상황의 가장 비관적인 결과를 비교해야 하는데, 최악의 무국가적 상태가 최악의 국가적 상태보다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최악의 무국가적 상태가 최악의 국가적 상태보다 항상 나은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최소 극대 기준에 의해 무국가적 상황에 대한 비관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성공할 수 없다.

(q1.2.2.2) 국가와 무정부 사이의 선택이 갖는 엄청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최고 극대의 기준을 사용하여 무국가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주의 깊은 접근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최소극대의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이 흡스적 상황은 미래의 것들을 포함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기술된 국가와 비교되어야 한다. 이런 비교가 일단 이루어지면, 분명 최악의 자연 상태가 더 나은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국가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최소극대의 기준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 건 국가를 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4-25)

1.2.3 최대 극대 기준에 의한 무국가 비판

(e1.2.3.1) 국가와 무정부 상태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최소 극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최대극대의 기준은 최소 극대의 기준과는 달리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고 그 중에서 최선을 택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최대극대의 기준은 세상일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관점을 적용하게 된다. 이런 경솔한 낙관주의는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낮은 확률로 나타나게 될 유용성의 극대화에 의지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q1.2.3.2) 다른 한편으로 최대 극대의 기준은 세상일의 움직임에 관해 가장 낙관적인 가정들 위에 입각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솔한 낙관주의 역시 설득력이 없다. 정말로, 불확실성 아래에서의 선택을 위해 제안된 어떤 결단 기준도 이 경우 설득력을 갖지 못하며, 그와 같이 미약한 확률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유용성의 극대화도 마찬가지이다.(25)

1.3 자연 상태

1.3.1 자연 상태에 대한 로크의 설명

(e1.3.1.1) 노직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연 상태를 로크의 자연 상태 개념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다. 로크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들은 자연법에 의한 규제 이외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행위할 수 있고, 자신들의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 때 어느 누구의 허락을 얻거나 타인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별자들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한 개별자들을 처벌하고 징벌을 가할 수 있다.

(q1.3.1.2)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들은 “자연의 법의 경계 안에 서는, 어느 타인의 허락을 얻거나 그의 의지에 의존함이 없이,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자신들의 행위를 결정하고 그들의 소유물들이나 사람들을 처리할 완전한 자유의 상태 속에 있다.” (§4) 자연의 법의 경계는 “어느 누구도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있어 그를 해하지 말도록” 요구한다. (§6) 일부 사람들은 이 경계를 넘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 서로를 해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와 같은 권리의 침해자들에 대항하여 자신과 타인을 방어할 수 있다. (§3) 해를 입은 쪽과 그의 대리자는 가해자로부터 “그가 받은 손해를 보상할 만큼의 것을 받아낼 수 있다.” (§10); “모든 사람들은 법의 위반을 방지할 정도까지는 그 법의 위반자들을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다.” (§7) 각 사람은 “차분한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만큼의 벌, 즉 범법자의 범법 행위에 비례하는 벌을 가할 수 있으며, 이 징벌은 보상과 범법 행위의 억제를 위한 것이다.” (§8)(31)

1.3.2 자연 상태에서 개인적 권리 집행에 의한 분쟁

(e1.3.2.1)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별자들은 자기 자신이 재판관이라고 말한다. 노직 역시도 이런 로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별자들이 재판관일 때, 개별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게 되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즉 타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이들은 자신의 손해의 양을 과대평가하고, 정도 이상으로 흥분하게 되어 가해자에게 지나친 보상을 요구하고, 과도한 처벌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권리 집행은 결국 반복적인 복수를 낳게 되어,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종식시킬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은 자연 상태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q1.3.2.2) 자연 상태에 있어서 상호 이해된 자연법은 매번의 우발적인 사태에 적합한 방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며,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때 사람들은 항상 미심한 점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자신은 옳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해나 손해의 양을 과대평가할 것이며 걱정은 그들로 하여금 가해자를 과도하게 징벌하려고 시도하고 지나친 보상을 징수하려 시도하게끔 유도할 것이다.(§§13, 124, 125) 이와 같이 해서 한 개인의 권리들(한 개인이 지나친 처벌을 받을 때 침해되는 그러한 권리를 포함해서)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집행은 분쟁으로, 끝없는 복수 행위와 보상 징수 행위의 연속으로 이끈다.(32)

1.3.3 자연 상태에서 분쟁 해결의 어려움

(e1.3.3.1) 자연 상태에서는 일단 발생한 분쟁은 그 다툼의 당사자가 그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확신할 방법이 없다. 개별자들은 언제나 보상을 받아내고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만 한다면 보상과 보복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분쟁을 끝내고 싶은 개별자라할지라도,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다. 옳고 그름에 관한 사실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에 이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 상태에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q1.3.3.2) 이와 같은 다툼을 해결하고 종결지으며, 그리고 양 당사자로 하여금 다툼이 끝났음을 알게 할 확고한 방법이 없다. 설사 한쪽이 그의 복수 행위를 그치겠다고 말한다 해도, 상대방은 먼저의 사람이 보상을 취하고 보복을 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며 따라서 기회가 주어지면 그럴 시도를 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지 않음을 알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한 분쟁에 있어 한 개인이 결단코 자신의 몫을 하려는 시도에 있어, 그가 사용할 어떤 방법도 상대방에게 불충분한 확신을 줄 것이다. 분쟁을 그치자는 무언의 협정도 역시 불안정한 것일 것이다. 서로가 불의의 표적이 되었다는 이러한 느낌은, 명명백백히 옳은 편이 있고 쌍방이 서로의 행위의 사실에 관해 동의하는 경우에도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사실과 옳음이 어느 정도 불확실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와 같은 복수의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다.(33)

1.3.4 자연 상태에서 분쟁 해결책으로서 상호 보호협회 형성

(e1.3.4.1) 자연 상태의 개별자들은 이러한 분쟁을 무한히 계속해서 방치하고자 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결여하고 있는 개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의 힘이 강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자연 상태의 개별자들은 이러한 경우 자신의 피해를 방관하고 있지 않으려 할 것이다. 아마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을 방어하며, 보상을 받고,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 행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점진적으로 개별자들은 서로 협동하여 권리를 보호하거나 행사하기 위해 서로가 도움을 요청하면 응할 수 있는 상호 보호협회를 형성할 수 있다. 즉 상호 보호협회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q1.3.4.2)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을 방어하며, 보상을 받아내고, 그리고 처벌할 수 있다. 타인들도 그의 요청에 따라 그의 방어에 합세할 수 있다. 그들은 그 개인에 합세해

공격자를 격퇴하고 그를 축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공공 정신이 강해서일 수도 있고, 그의 친구이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그가 과거에 그들을 도와주었거나, 그들이 앞으로 그가 그들 자신들 도와주길 원해서이거나, 또는 무엇에 대한 대가 때문일 수도 있다. 일단의 개인들은 상호 보호 협회들을 형성하여 한 사람이 그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행사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 모두가 응하게 만들 수도 있다. 협동할 때 힘이 생긴다.(33)

1.4 개인의 권리

(e1.4.1) 노직은 개인은 삶,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매우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개인은 권리를 가지며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이들 개인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미국의 무정부주의자인 벤자민 투커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벤자민 투커와 같은 무정부주의자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반면에 노직은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벤자민 투커가 개인이 자신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외적인 통제는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면에 노직은 개인들의 권리를 위해하지 않고서도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폭력, 절도, 사기, 계약불이행과 같은 것을 보호하는 제한적 기능을 갖는 최소 국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노직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삶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재산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형성할 일반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다 완벽하게는, 개인은 폭행, 침해, 강제, 사기, 또는 기만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환 또는 상속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소유함으로써, 자유 재산권을 형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노직에게 있어서,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만큼이나 강력하다.

(q1.4.2) 개인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이들 개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권리침해를 하게 된다). 이 권리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폭넓은 것이라서 만약 국가나 그 관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 국가에 관한 주된 우리의 결론은 강요, 절도, 사기, 계약의 강제 등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좁은 기능들에 제한된 최소국가는 정당화되며,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특정의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며, 최소국가는 옳을 뿐 아니라 고무적이다. 이 결론들의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함축은 일부 시민들로 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또는 국가가 시민들 자신의 선과 보호를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할 의도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1)

1.4.1 노직과 무정부주의자의 권리에 있어서 공통점

(e1.4.1.1) 권리와 관련하여 노직과 무정부주의자는 우리가 삶,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매우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다. 노직은 개인은 권리를 가지며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이들 개인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미국의 무정부주의자인 벤자민 투커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벤자민 투커와 같은 무정부주의자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반면에, 노직은 폭력, 절도, 사기, 계약불이행과 같은 것을 보호하는 제한적 기능을 갖는 최소 국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1.4.2 권리의 공리주의

(e1.4.2.1) 공리주의자는 벤담의 전제로부터 ‘각자는 하나로 간주되고 하나 이상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고, 시지위크는 ‘어떤 한 개인의 선이 어떤 다른 사람의 선 보다, 보편적 [...] 관점에서, 더 중요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전제들 각각은, 서로 결합되었을 때, 행복이나 쾌락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와는 무관하게 그것의 총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리주의 결론의 기초가 된다. 이런 직관적인 호소력을 갖는 이론은 극단적 결론을 갖는다. 영희가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통해 얻는 쾌락보다 자전거를 가졌을 뿐인 철수가 영희의 그랜저 승용차를 통해 더 큰 쾌락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영희는 수입 명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어서 그랜저 승용차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리주의자는 영희에게서 그랜저 승용차를 빼앗아서 철수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쾌락의 총량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세련된 공리주의자는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망설일 것이다. 그러나 노직의 견해와 '조야한 공리주의'를 대비시킴으로써, 우리는 노직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조야한 공리주의는 단지 전체적인 행복을 극대화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무엇인지는 개의치 않는다. 따라서 개인의 독립성은 결국 중요하지 않다.

(q1.4.2.2) 공리주의는 권리와 이의 비침해에 대해 응분의 고려를 하지 않고, 그 대신 부차적인 위치에 내버려 둔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에 대한 많은 반례들의 요점은 이런 식의 반대이다. 가령, 이웃을 복수극으로 부터 구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그러나 한 이론은 권리의 비침해를 일차적인 것으로 논하면서도 이를 잘못된 곳에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논할 수 있다. 권리 침해의 총량을 최소화함에 관한 어떤 조건이 성취되어야 할 그 바람직한 중국의 상태의 일부로서 충족되어 왔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일종의 권리의 공리주의를 갖게 된다. 여기에서 최소화되어야 할 권리의 침해라는 개념은 공리주의적 구조 안에서 관련 있는 중국의 상태로서, 행복의 총합이란 개념을 대체한다. 이런 대체는 우리로 하여금, 필요하다면, 즉 한 사회 내에서의 권리 침해의 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이 처벌을 통해 타인에 의한 보다 큰 권리의 침해를 막을 수 있고, 해서 그 사회 내에서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들어 그 처벌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다.(51-52)

(q1.4.2.3) 측면적 제약 사항은 이 사항이 규정하는 특정 방식에 의한, 타인의 불가침성을 표현한다. 이런 식의 불가침성은 다음의 금지 명령에 의해 표현된다. “사람들을 특정의 방식으로서는 이용하지 말라.” 중국 상태 지향적인 입장은, 반면, 사람들이 목적이고 단지 수단이 아니라는 견해를 다른 식의 명령으로 표현한다.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행위하라.” 이 명령의 준수 자체가, 특정의 한 방식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함을 허락할 수 있다. 칸트가 이 견해를 가졌었다면, 그는 정언명령의 제 2형식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했었을 것이다.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해라.” 그의 실제 형식은 다음과 같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경우에서건, 타인의 경우에서 건 간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인간성을 결코 단지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접하라.”(56)

1.4.3 공리주의자의 권리에 대한 노직의 비판

(e1.4.3.1) 노직의 관점에서 보면, 공리주의 관점은, 개인의 독립성을 무시함으로써, 도덕적인 과오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노직은 이런 도덕적인 과오가 형이상학적 과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영화에게서 차를 빼앗아서 철수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리주의자의 대답은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왜 우리는 행복을 극대화하는데 흥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공리주의자는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당장의 희생, 즉 저축은 가치 있는 일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리주의자는 이런 추론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하여 몇몇 사람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것, 즉 행복의 전체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나 노직은 사회 자체를 하나의 실체로 상정하고, 이것이 쾌락과 고통을 경험하며, 사회의 웰빙이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형이상학적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라는 실체는 없다. 단지 독립

된 개인만이 존재할 뿐이다. 또한 노직은 공리주의가 개인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도덕적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사람의 쾌락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없다.

1.4.3.1 행복 극대화에 대한 공리주의자의 해명

(e1.4.3.1.1)노직은 공리주의자가 다음과 같은 유추를 통해 행복 극대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입의 10퍼센트를 저축하는 것은 아마도 직접적인 행복을 약간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저축으로 원하던 차를 살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바라던 별장을 살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저축을 한다면, 당장의 희생은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저축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며, 순간의 만족감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익과 부담을 미리 재분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이익을 위하여 현재의 부담을 받아들인다. 공리주의자는 이런 추론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한다. 즉 다른 사람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하여 몇몇 사람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것, 즉 행복의 전체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

1.4.3.2 사회를 하나의 실체로 전제하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e1.4.3.2.1)노직은 사회가 하나의 실체라는 데 반대한다. 미래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 저축하는 것이 나에게 적어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익을 누릴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 즉 부담을 감당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한명의 사람이어야 하며,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전체적인 행복이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나의 미래 이익은 나의 현재 부담을 상쇄시켜 준다. 그러나 영희의 차를 빼앗아서 철수에게 주었을 때, 고통을 겪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며, 그

이전 행위에 의해 극대화 되는 행복은 한 사람의 행복이 아니다. 영희의 행복을 줄여서 철수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런 태도는 존재의 기초 단위를 개인에 두지 않고 사회를 하나의 실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점에 근거하여, 노직은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 자체를 하나의 실체로 상정하고, 이것이 쾌락과 고통을 경험하며, 사회의 웰빙이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형이상학적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라는 실체는 없다. 단지 독립된 개인만이 존재할 뿐이다.

1.4.3.3 개인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e1.4.3.3.1) 어떤 공리주의자는, 한 사람의 행복이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엄밀하게는 보상할 수 없다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노직은 공리주의가 개인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도덕적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resource)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의 웰빙을 희생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공리주의자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노직은 개인의 독립성을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는 도덕적 견해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견해의 핵심부에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복지에 대한 고려가 이런 권리를 힘으로 눌러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 본다면, 한 사람의 쾌락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상에 줄 수 없다.

1.4.4 자연권

1.4.4.1 자연권의 두 가지 특성

(e1.4.4.1.1) 노직은 우리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권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지닌 것인가? H.L.A. Hart는 자연권의 두 가지 중요한 특성에 관해 말하고 있다. 첫째, 자연권은 ‘선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어야만 한다. 사람들은 사회의 구성원이거나 각자가 서로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갖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으로서 자연권을 가진다.’ 둘째, 자연권은 ‘사람의 자발적 행위에 의해 만들어 지거나 수여되는 것이 아니다.’(“Are There Any Natural Rights?” in *Theory of Rights*, [ed. J Waldron, 1984, p.77-78) 따라서 자연권은 법이나 협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와는 무관하게 존재한다. 인간이 자연권을 갖는다는 주장의 일부분은 인간의 법과 협약을 비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1.4.4.2 자연권에 대한 벤담의 견해

(e1.4.4.2.1) 자연권을 갖는 것이 자연적으로 팔과 다리를 가지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것인가? 자연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는 아닌 것이 확실하다. 벤담은 자연권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자기 모순적이며, 권리는 법에 의해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의미를 갖는 유일한 권리는, 인간의 법에 의해 창조된 법적 권리이며, 신적인 법 제정자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신적인 권리이다. ‘나에게 있어서 권리는 법의 산물이다. 다른 종류의 권리는 법의 다른 작용에서 결과된 것이다.’(벤담, *Anarchical Faoacies*, in *Nonsense upon Stilts*, [ed] Jeremy Waldron, 1987, p.73) 결국 ‘자연권은 단순히 무의미한 것이다. 자연적이며 불가침한[즉 침해될 수 없는] 권리는 수사학적

으로 무의미하며, 장담하건데 무의미하다.’(벤담, 앞의 책, *Anarchical Faooacies*, in *Nonsense upon Stilts*, [ed] Jeremy Waldron, 1987, p.53)

1.4.4.3 자연권에 대한 로크의 옹호

(e1.4.4.3.1) 인간 존재가 자연권을 가졌다고 로크가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크는 이런 견해를 옹호하기 위해서 어떤 고려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로버트 필머는 *Patriarcha*라는 책을 통해 왕권신수설을 옹호하기 위하였다. 로크는 로버트 필머의 왕권신수설을 비판하면서 자연권을 옹호하고 있다.

1.4.4.3.1 군주의 통치권에 대한 필머의 견해

(e1.4.4.3.1.1) 로크 정치철학의 주요 저작인 『정치학』(*Two Treatises of Government*)는 로버트 필머 경의 책에 대한 응답으로 기획되었다. 로버트 필머는 왕권신수설을 옹호하기 위해 *Patriarcha*라는 책을 쓴 사람이다(1680). 그러나 로크는 이런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목적을 뛰어 넘어 주권자의 힘의 적절한 기초와 제한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Patriarcha*에서, 필머는 군주가 성스럽고, 절대적인 권리로 통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권리는 신의 최초로 아담에게 맡긴 세계로까지 이어져 추적될 수 있다. 기초적인 논변은 단순한 것이다. 신은 세계의 통치자로 아담을 창조하여, 지구와 그 피조물들과 인간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통치권을 주었다. 아담은 그 권한을 후손에게 전해주었다. 현재의 왕과 여왕은 신이 준 절대적인 통치의 권리를 아담에게서 이어받았다. 결론적으로 군주의 통치권은 무한하다. 그의 행위가 정의로운지에 대해 어떤 고려도 있을 수 없다. 군주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즉 적이나 무고한 사람을 투옥하거나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군주에게 속하는 것이다.

1.4.4.3.2 군주의 통치권에 대한 필머의 견해에 대한 로크의 비판

(e1.4.4.3.2.1) 로크는, 여러 곳에서 필머를 논박하면서, 필머의 견해를 철저하게 파괴하였다. 첫째, 그는 성서의 구절들이 신이 아담에게 다른 사람을 통제할 권리를 주었다는 해석을 지지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아담이 이런 권리를 부여받았을 때조차도, 그의 상속인들이 합법적 통치의 자격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셋째, 통치의 권리를 상속받았다할지라도, 상속의 규칙은 신이나 자연의 법이 아니라 협약의 문제이다. 그래서 상속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모든 경우에 비밀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누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실이 있다할지라도, 현재의 군주가 아담에서 이어받은 신이 지정한 합법적 통치자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e1.4.4.3.2.2) 로크의 『정치학 2권』에서 서술된 적극적 견해는 성서의 권위가 필머의 입장을 지지해주지 못하며, 아주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논변을 통해 시작하고 있다. 성서는, 잘 읽어 본다면, 신이 지구를 아담에게 주지 않았으며, 그가 유일한 소유주가 아니며, 모든 인간이 지구의 공동 소유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로크는 주장한다. 신은 인간 존재를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으로 창조하였다. 인간은 지구의 우월한 존재가 아니며,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1.4.4.3.3 자연권에 대한 제한

(e1.4.4.3.3.1) 로크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연 상태에서조차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법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은 자연법에 의해 주어진다. 로크는 자연법을 이성의 법이며, 신의 법이라고 말한다. 자연법은 우리가 신의 재산이며, 신에 의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신의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 졌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그리고 소유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로크는 자연법이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고 주장

한다. 즉 우리는 우리가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로크는, 이것을 기초로, 자연 상태에서 사적 재산권 또한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4.4.4 자연권에 대한 칸트주의적 설명

(e1.4.4.4.1) 노직은 자연권을 설명하면서 칸트주의적 이념, 즉 일반적으로 ‘정언명령의 두 번째 형식’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이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정언 명령의 두 번째 형식은 ‘그대는 항상 인간성을 [...] 결코 단지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접하라’이다. 따라서 노직은 ‘행위의 측면적 제약 사항의 이념은, 개인은 목적이지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는 근원적인 칸트적 원리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자연권에 대한 노직의 설명을 옹호하기 위한 가능성 있는 논변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를 ‘살아 있는 도구’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을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우리가 가방, 신발, 연필 등을 이용하듯이, 내가 어떤 사람을 단순히 수단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비난받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행위가 간과하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나의 목적에 따라 단순히 하나의 도구로 다루는 것을 전적으로 온당치 않은 것으로 만들어 주는 상당히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사람들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한다는 것은 이런 특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들에 대해 행동하는 것이다.

(q1.4.4.4.2) 행위의 측면적 제약 사항의 이념은, 그 근처에서, 개인은 목적이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는 칸트적 원리를 반영한다. 개인들은 그들의 동의 없이는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희생될 수도,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개인들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다. 이 목적과 수단의 개념을 더 밝혀야겠다. 수단의 대표적인 예인 도구를 생각해 보자. 도구를 어떻게 타인들에 대해 써야 하는가에 대한 측면적 제약 사항은 없다. 이를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따라야할 절차가 있고 이를 보다 더 뜨는 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를 가장 잘 성취하기 위해 이 도구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에는 제한이 없다.(54)

(q1.4.4.4.3) 측면적 제약 사항은 이 사항이 규정하는 특정 방식에 의한, 타인의 불가침성을 표현한다. 이런 식의 불가침성은 다음의 금지 명령에 의해 표현된다. “사람들을 특정의 방식으로서는 이용하지 말라.” 중국 상태 지향적인 입장은, 반면, 사람들이 목적이고 단지 수단이 아니라는 견해를 다른 식의 명령으로 표현한다.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행위하라.” 이 명령의 준수 자체가, 특정의 한 방식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함을 허락할 수 있다. 칸트가 이 견해를 가졌었다면, 그는 정언명령의 제 2형식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했었을 것이다.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라.” 그의 실제 형식은 다음과 같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경우에서건, 타인의 경우에서건 간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인간성을 결코 단지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접하라.”(56)

1.5 보호 협회

(e1.5.1) 자연 상태에서 보호협회가 성립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자연 상태에 있는 각자는 도덕적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집행할 권리를 갖는다.

2. 각자는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를 처벌할-적당히 제한된 지역 내에서-권리가 있다.

3. 다수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상호 합의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권리 집행과 침해 처벌을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수가 담당할 수도 있고 한 개인이 담당할 수도 있다.

4. 한 개인, 나아가서 개별자들의 한 집단은 시행과 처벌 업무 등등을 자신들의 대행자로서(아마도 반드시 그렇진 않겠지만, 자신들의 고용인으로서) 타인들에게 할당할 수 있다. 이 대행인들은 개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권한을 부여받은 타인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권리는 이전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한 개인은 일련의 이전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권리의 담당자가 될 수도 있다. 마치 이것은 한 사람의 대표가 위원회선거에서 수많은 대리권을 행사하거나, 한 사람의 변호사가 한 건의 소송에서 수많은 고객의 재산상 이익을 대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일 것이다.(Wolff, “Robert Nosick's Derivation of the Minimal State”, Reading Nozick, Jeffrey Paul, Rowman&Littlefield, p.92)

1.5.1 보호 협회의 출현

(e1.5.1.1)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을 방어하며, 보상을 받아내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이것이 존중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권리가 존중되게 하기 위해서는 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나 법률을 집행하는 기구가 있어야만 한다. 이런 제도나 기구가 권리 보호를 위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권리는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권이 있다할지라도, 이를 집행할 강제력이 없다면, 자연권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결국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이 있다할지라도, 이를 집행할 강제력이 없다면, 개인은 노예 상태, 절도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e1.5.1.2) 자연 상태는 혼란과 폭력의 무정부상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자연 상태는 상이한 이해관계와 주관적 평가의 차이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분쟁과 같은 문젯거리를 처리하기 위하여, 즉 상호 권리 보호와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 또는 보상을 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호 보호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보호 요청에 항상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극복하기 위한 자연적 발전과정으로서 상업적 보호기구가 탄생할 것이다. 보호 협회는 타인을 보호하는 전문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상호 보호 협회에 가입하여 보호를 받고 타인을 보호하는 대신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보호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상호 보호 협회는 전문적인 보호 대행 업소로 나아가게 된다.

(q1.5.1.3) 자연 상태에서 [분쟁과] 같은 문젯거리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을 방어하며, 보상을 받아내고, 그리고 처벌할 수 있다(아니면 적어도 그러려고 최선을 다한다). 타인들도 그의 요청에 따라 그의 방어에 합세할 수 있다. 그들은 그 개인에 합세해 공격자를 격퇴하고 그를 축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공공 정신이 강해서일 수도 있고, 그의 친구이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그가 과거에 그들을 도와주었거나, 그들이 앞으로 그가 그들 자신을 도와주길 원해서이거나 또는 무엇에 대한 대가 때문일 수도 있다. 일단의 개인들은 상호 보호협회들을 형성하여 한 사람이 그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행사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 모두가 응하게 만들 수도 있다. 협동할 때 힘이 생긴다.(33)

1.5.1.1 자연 상태에서 보호 협회로 이행

(e1.5.1.1.1) 단지 개인적인 다툼만 있는 상황, 즉 사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배상이 어떤 것인지에 동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인 상황은 보호 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호 협회가 있다고 해서, 폭력집단,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전쟁과 마찬가지로 수준의 문젯거리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할지라도, 보호 협회가 있다면, 최초의 상태, 즉 자연 상태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가질 것이다.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합리적이라면, 협력할 것이고 또한 자기애나 정념에 눈이 멀지 않았다면, 이들은 거의 맹목적으로 가치 없는 것을 주장하고 이루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려고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다툼이 적어지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보호 협회로 우리를 나아가게 할 것이다.

(q1.5.1.1.2)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때 사람들은 항상 미심한 점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자신은 옳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해나 손해의 양을 과대평가할 것이며 걱정은 그들로 하여금 가해자를 과도하게 징벌하려고 시도하고 지나친 보상을 징수하려 시도하게끔 유도할 것이다. [...] 복수와 보상을 징수하려는 끝없는 행위를 이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툼을 해결할 어떤 확실한 방법도 없다. [...] 설령 한쪽이 그의 복수 행위를 그치겠다고 말한다 해도, 상대방은 먼저의 사람이 보상을 취하고 보복을 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지 않음을 알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 서로가 불이익의 표적이 되었다는 이러한 느낌은, 명명백백히 옳은 편이 있고 쌍방이 서로의 행위의 사실에 관해 동의하는 경우에도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사실과 옳음이 어느 정도 불확실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와 같은 복수의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신의 권리들을 행사할 힘을 결여할 수 있다. 그는 그의 권리들을 침해한 적이 강한 경우 그를 처벌하거나 보상을 받아낼 수 없을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분쟁과] 같은 문젯거리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을 방어하며, 보상을 받아내고, 그리고 처벌할 수 있다(아니면 적어도 그러려고 최선을 다한다). 타인들도 그의 요청에 따라 그의 방어에 합세할 수 있다. 그들은 그 개인에 합세해 공격자를 격퇴하고 그를 축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공공 정신이 강해서일 수도 있고, 그의 친구이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그가 과거에 그들을 도와주었거나, 그들이 앞으로 그가 그들 자신을 도와주길 원해서이거나 또는 무엇에 대한 대가 때문일 수도 있다. 일단은 개인들은 상호 보호협회들을 형성하여 한 사람이 그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행사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 모두가 응하게 만들 수도 있다. 협동할 때 힘이 생긴다.(32-33)

1.5.1.2 자연 상태에 대한 보호 협회의 이점

(e1.5.1.2.1)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순전히 개인적인 다툼만 있는 상황, 즉 권리 침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배상이 어

편 것인지에 동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상호 보호 협회는 이런 최초의 상태에 비해 이점을 더 많이 가질 것이다. 상호 보호 협회 안에서 구성원들은 합리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한 주장하는 사람에 협력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애나 정념에 눈이 멀지 않았다면, 거의 가치 없는 주장으로 억지를 부리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려고 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다툼이 적어지기를 기대할 것이다. 상호 보호 협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보상을 받아내는 이점을 갖게 될 것이다.

1.5.2 보호 협회의 문제점

(e1.5.2.1) 우리가 상호 보호 협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보상을 받아내고,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바랄 것이다. 그리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고, 약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호 보호 협회에는 불편한 점들이 있다. 상호 보호 협회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항상 요청에 응하여 나아갈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한다. 항상 준비 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 많은 불편함이 뒤따를 것이다. 또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구성원 모두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누가 봉사하고 누가 면제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 보호 협회의 회원은 누구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원들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너무도 애민하여 사소한 일에 까지 회원을 동원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방어를 핑계로 회원을 동원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회원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보호 협회의 두 회원이 다투는 경우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q1.5.2.2) 단순한 상호 보호 조합은 두 가지의 불편한 점들이 있다.

(1) 모든 사람들이 항상 보호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대기 상태에 있어

야 한다.(그리고 모든 회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보호 기능들에 대해 누가 봉사할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2) 어떤 회원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의 동료 회원들을 불러낼 수 있다. 보호 협회는 트집을 잘 잡거나 편집병적인 회원들이 불러대는 대로 움직이길 원치 않는다. 더구나 자기 방어라는 미명하에 그 협회를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회원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동일 협회의 두 다른 회원들이 각각 동료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다투고 있을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할 것이다.(33-34)

1.5.2.1 보호 협회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

(e1.5.2.1.1) 보호 협회에서 자기 회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들 사이의 분쟁에 간섭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협회 내부의 불화와 분쟁으로 결국에는 협회가 해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보호 협회는 불간섭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엔 회원 간의 분쟁을 처리할 방안으로 어떤 주장이 옳은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1.5.2.1.1 회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불간섭 정책

(e1.5.2.1.1.1) 상호 보호 협회 내의 회원들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상호 보호 협회는 이들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 경우 단순히 채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원들 상호 간의 분쟁에는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서로 분쟁하게 되며, 이런 분쟁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로 반목하는 소규모 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상호 보호 협회는 해체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불간섭 정책을 채택하게 되면, 협회의 회원들은 가능한 한 많은 보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될 것이다. 여러 보호 협회에 가입하게 된 결과로 회원들은 어떤 보복적 행위나 방어적 행위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보호 협회는 회원들 간에

분쟁에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할 수 없다.

(q1.5.2.1.1.2) 상호 보호 협회는 그의 회원들 사이의 분쟁을 불간섭의 정책을 취함으로써 다루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정책은 협회 내부에 불화를 야기할 것이며 서로 분쟁하는 하위 집단들의 형성을 유도하여 결국 협회의 해체를 야기할지도 모른다. 이 정책은 또한 잠재적 가해자들로 하여금 될 수 있는 한 많은 상호 보호 협회에 가입토록 조장하여, 보복적 또는 방어적 행위로부터의 면책 특권을 취득케 함으로써 협회의 처음의 적격 심사 절차의 적합성을 훼손케 할 것이다. 해서 위의 악용을 견디낼 모든 보호 협회들은 불간섭의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34)

1.5.2.1.2 회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설정

(e1.5.2.1.2.1) 회원들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보호 협회는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할 것이다. 회원들 간에 끊임없는 다툼과 이에 따른 값비싼 대가를 피하기 위해서도 이런 절차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q1.5.2.1.2.2) 한 회원이 타 회원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때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어떤 절차를 채용할 것이다. 많은 임의적인 절차들이 상상될 수 있으나(가령, 먼저 불평을 호소한 회원의 편을 든다든가 하는 식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주장이 옳은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채용하는 협회에 가입하기를 원할 것이다. 협회의 한 회원이 비회원들과 분쟁을 일으킬 경우에도, 협회는 어떤 식으로라도 누가 옳은가를 결정하길 원할 것이다. 그것은, 정당한가 부당한가에 관한 각 회원들 사이의 다툼에 끊임없이 그리고 비싼 대가를 치루며 연루되길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하다.(34)

1.5.2.1.3 사적 보복의 권리 포기 요구

(q1.5.2.1.3.1) 보호 대행 업소는 그들의 고객으로 하여금, 그들이 이 업소의 비 고객들에 의해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경우, 자신들의 사적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것인가? 그와 같은 보복은 다른 대행업소

나 개인에 의한 역 보복으로 이끌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보호 대행 업소는 그의 고객을 역 보복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책임 때문에 뒤늦게 그 뒤업된 사건에 휘말려 들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보호 대행 업소는 그들에게 고객을 대신해 보복을 할 권한이 먼저 주어지지 않으면 그 고객을 역 보복으로부터 방어해 주지 않을 것이다. (대행 업소는 단지 그와 같은 보전補填 범위를 제공하는, 보다 폭넓은 보호 보험 증권에 대해 보다 비싼 요금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대행 업소는 자신과의 협약의 일부로서 한 고객이 자신의 다른 고객에 대한 사적인 정의 행사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계약을 통해 요구할 필요도 없다. 그 업소는 단지 한 고객 C가 다른 고객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사적으로 행사할 때 이 다른 고객에 의한 C에 대한 역 보복으로부터 보호해 주길 거절하기만 하면 된다. 이 상황은 C가 비 고객에게 행하는 경우의 그것과 유사하다. C가 자신이 속한 대행 업소의 다른 고객에 대해 행동을 취한다는 추가적 사실은, 그 업소가 그의 고객 중 하나에게 사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비 고객에 대해 하듯이 C에 대해 행동을 취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은 대행업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권리의 사적인 행사를 최소한도로 줄인다.(36-37)

1.5.3 상업적인 보호 대행사

(e1.5.3.1) 보호 협회에 의해 비합리적인 다툼이 적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보호 협회의 큰 이점이다. 그러나 보호 협회가 결성되면, 다른 불이익이 생겨나게 된다. 즉 동료들을 위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소비된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자하는 것이다. 노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의 분화를 제시한다. 진정한 자유 시장에서, 그는 기업가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상호 보호 협회에 참여하여 보호를 받는 것보다. 보호 대행 회사의 서비스를 구매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 즉 상업적인 보호 대행사가 설립된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보호 협회를 형성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서비스 회사를 고용하려고 할 것이다.

(q1.5.3.2) 모든 사람들이 대기 상태에 있음으로 해서 초래되는 불편함은, 그들의 당시의 행위나 성향이나 비교적인 이점들이 무엇이건 간에 노동의 분배와 교환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일부의 사람들이 보호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용될 것이고, 어떤 사업가들은 보호라는 봉사를 파는 기업을 설립할 것이다. 다양한 보호 보험 증권들이, 보다 포괄적이고 정성 있는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될 것이다. 한 개인은 탐색, 체포, 유죄, 유무의 사법적 결정, 처벌, 그리고 보상금의 징수의 모든 보호적 기능들까지는 사실 보호 대행 업소에 넘기진 않더라도 그 업소와 보다 구체적인 협정이나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다. 그는, 그가 자신의 소송 사건의 재판관이 될 경우의 위험을 고려하여, 자신이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에 관한 결정권을 다른 중립적이거나 덜 개입된 제 3자에 넘길 수도 있다. 정의가 행사되었음을 보이는 데서 오는 사회적 효과를 위해서 그 제 3자는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중립적이며 정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어야 한다.(34-35)

1.5.4 지배적인 보호 협회

1.5.4.1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출현

1.5.4.1.1 상업적인 보호 대행사에서 지배적인 보호 협회로 이행

(e1.5.4.1.1.1) 상업적인 보호 대행사가 처음엔, 일정한 지역에, 서로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노직은 이것이 독점, 또는 적어도 과점적 성향을 갖는 자유 시장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자유시장적 원리에 따라 경쟁하는 대행사가 각자의 이익에 따라 합병하거나, 서로 돕는데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대행사의 구성원들 간의 다툼은, 상호 소모적인 싸움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대행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합병, 지배권 취득,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구성원의 유형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즉 일정한 지역에 하나의 지배적인 보호 대행사가 있는, 또는 상호 협력하는 대행사들이 연합하여 하나로 통합하는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1.5.4.1.2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출현 방법

(e1.5.4.1.2.1) 보호 협회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해질 경우 지배적인 보호 협회로 발전하게 된다. 특정 보호 협회가 특정 지역에서 강력하게 되는 방법은 보호 협회들이 힘으로 싸워서 특정한 한 보호 협회가 항상 승리하는 경우, 고객들은 승리하는 보호 협회의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보호 협회가 지배적인 보호 협회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각각의 보호 협회가 각각의 지역을 나누어 집중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보호 협회들의 세력 균형이 비슷하여, 투쟁하여 지고이기는 경우가 거의 동등하다면, 이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위의 통제 기관을 두고 분쟁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하는 방법이다.

(q1.5.4.1.2.2) 처음에는 여러 상이한 보호 협회들이나 회사들이 동일한 지역에서 그들의 봉사를 제공할 것이다. 상이한 대행업소의 고객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업소들이 분쟁의 처리에 관해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물론 각각은 벌금을 징수하려 할지도 모르나). 그러나 만약 그들이 사건의 시비에 관해 다른 결론에 이르고, 한 업소는 그의 고객을 보호하려는 반면, 다른 업소는 그를 처벌하거나 보상을 하게끔 시도한다면 어떠한가?

1. 그런 상황에서 두 대행 업소는 힘으로 겨룬다. 그리고 그 하나가 항상 이긴다. 지는 업소의 고객들은 이기는 업소의 고객들과의 분쟁에서 보호를 잘 받지 못하므로, 승자의 고객이 되기 위해 그들의 업소를 떠난다.

2. 한 대행 업소는 그의 지배력을 한 지역에 집중하고, 다른 업소는 다른 곳에 집중한다. 각자는 각자의 지배력의 중심에 가까운 곳에서 벌인

결전에서 승리한다. 한 업소와 거래하나 다른 업소의 세력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대행업소의 본부 가까운 곳에서 이사하거나 다른 보호 대행업소와 거래를 튼다(경계는 국가 간의 그것만큼이나 분쟁거리다).

이 두 경우의 어느 경우에도 대행업소가 지역적으로 산재될 여지가 없다. 오직 한 보호 대행업소만이 한 지역에서 활동한다.

3. 두 업소가 팽팽한 실력으로 자주 싸운다. 그들은 비슷하게 이기고 지고 한다. 그들의 산재한 회원들은 자주 거래하며 자주 분쟁을 일으킨다. 또는 싸움이 없어도 또는 몇 번의 작은 충돌 후에, 업소들은 예방적 대책 없이는 그와 같은 싸움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인식한다. 어쨌건, 두 업소는 빈번하며, 그 대가가 크고, 소모적인 전투를 피하기 위해, 아마도 간부 직원들을 통해서 그들이 상이한 판결에 이르는 그런 사건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그들은 그들 각각의 결정이 다른 경우 그들이 판결을 의뢰할 수 있는 제3의 재판관이나 법정을 마련하고 그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다(또는 그들은 규칙을 세워 어떤 상황에선 어떤 대행업소가 재판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겠다). 이와 같이 해서 상고 법정 그리고 법들 사이의 상충 및 재판권에 관한 합의된 규칙들의 체계가 생겨난다. 여러 상이한 대행 업소가 영업을 하나, 통일된 하나의 연방적 사법 조직이 존재하며 그 업소들은 이의 구성 요원이다.(37-38)

1.5.4.2 지배적 보호 협회와 국가의 차이점

(e1.4.4.2.1) 노직은 어떤 조직이 국가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두 가지 요건은 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공급이다.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이런 두 가지 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보호 협회가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처벌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합당하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는 가입 조건으로서 자신들을 보호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합당하다. 그래서 투쟁 행위는 대행사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보호 대행사의 회원

이 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강력한 힘을 가진 개인은 이런 서비스를 구매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타인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성공적일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자연권을 포기하도록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를 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개인들이 처벌할 수 있는 사적인 권리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배적인 보호 대행사는 분명 국가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지배적인 보호 대행사는 국가로서 요구되는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 모든 사람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q1.4.4.2.2) 두 가지 점에서 사적인 보호 협회는 최소 국가와는 다르다고, 즉 국가의 최소 개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될 가능성이 있다. (1) 그 협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듯하며, (2) 그 영역 안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45)

(q1.4.4.2.1) 한 영토 안에서 지배적인 보호 업소는 국가로서 요구되는 바 권력의 사용에 독점권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영토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해서 지배적인 보호 업소는 전혀 국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48)

1.4.4.2.1 권력 독점에 있어서 지배적 보호 협회와 국가의 차이점

1.4.4.2.1.1 권력 독점과 관련한 지배적 보호 협회의 특징

(e1.4.4.2.1.1.1) 국가와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는 국가가 권력을 독점하고서 개인들의 권리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개인들의 권리 행사를 허용하는 듯이 보인다. 즉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관할권내의 거주자들 중에는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보호 서비스를 거부한 독립된 개인이 있다. 그 독립된 개인은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권한 사용을 자신의 권리 침해로 인식한다.

(q1.4.4.2.1.1.2) 두 가지 점에서 사적인 보호 협회는 최소 국가와 다르다고, 즉 국가의 최소 개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될 가능성이 있다. (1) 그 협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듯하며, (2) 그의 영역 안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45)

1.4.4.2.1.2 권력 독점과 관련한 국가의 특징

(e1.4.4.2.1.2.1) 권력 사용의 독점권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이다. 국가는 항상 권력 사용의 독점권을 주장하며, 권리의 사적인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는 자신의 권력 사용 독점권을 침해하는 개인들을 모두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q1.4.4.2.1.2.2) 막스 베버 전통의 저술가들은 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 권력의 사용에 있어 독점권 - 권리의 사적인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 의 소유가 국가의 존재에 있어 결정적이라 생각한다. [...] 국가는 누가 어느 때 권력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독점권을 주장한다. 국가는 그 자신만이, 누가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서 권력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는 자신의 경계 안에서의 권력의 사용의 합법성과 허용 가능성에 판단을 내릴 독점적 권리를 자신에 유보한다. 더 나아가서 국가는 이 권리 주장된 독점권을 침해하는 모든 자들을 처벌할 권리를 주장한다.(45-46)

1.5.4.2.1.3 처벌에 있어서 지배적인 보호 협회와 국가의 차이점

1.5.4.2.1.3.1 처벌과 관련한 국가의 특징

1.5.4.2.1.3.1.1 국가의 권력 독점적 특성이 침해되는 두 가지 방식

(q1.5.4.2.1.3.1.1.1)이 독점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침해될 수 있다.

(1) 어떤 사람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 (2) 그 자신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나, 한 집단이나 개인이, 어느 때의 그리고 누구의 권력 사용이 적합하며 합법적인지를 결정할 대안적 권위라 주장할(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유일한 합법적인 권위라 주장할) 수 있다.(46)

1.5.4.2.1.3.1.2 국가의 독점적 권력 침해에 대한 전면적 처벌

(q1.5.4.2.1.3.1.2.1) 국가 성립의 한 필요조건은 이것(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능력이 닿는 한(즉 그러한 데서 초래되는 비용, 실행 가능성, 이것이 해야 할 더 중요한 것들 등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명백한 허락 없이 권력을 사용한 사람이면 누구나 처벌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이 허락은 개별적인 허락일 수도 있고 어떤 일반적인 규칙이나 인가를 통해 부여된 것일 수 있다).(47)

1.5.4.2.2.3.1.3 국가 권력 침해에 대한 용서의 권리와 입증 책임

(q1.5.4.2.2.3.1.3.1)이것 가지고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국가는 사후에 어떤 사람을 용서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처벌하기 위해선, 국가는 인가되지 않는 권력의 사용을 찾아내야 할 뿐 아니라 어떤 일정한 증명 절차를 통해 그러한 사용일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47)

1.5.4.2.1.3.2 처벌과 관련한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특징

(q1.5.4.2.2.3.1.3.2) 보호 대행업소는, 짐작컨대, 개인적으로건 집단적으로건 [허락없는 권력 사용에 대한 처벌을] 공언하지 않는다. 이들이 그러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합법적인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사적 보호 협회의 조직은, 도덕적으로 비합법적인 행위를 취하기 전에는 어떤 독점적 요소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서 국가를 구성하지도 이를 포함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독점적 요소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선, 한 집단의 사람들 또는 어떤 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그들은

사적인 보호 대행업소의 조직 안에 살면서 그 어느 보호 단체에 가입하길 거부하고,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를 그들 자신이 판단하길 고집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들로부터 보상을 받아냄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개인적으로 행사하려 할 수 있다.(47)

1.5.4.2.2 보호 범위에 있어서 지배적인 보호 협회와 국가의 차이점

(e1.5.4.2.2.1) 국가와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보호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국가는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지만,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보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람만을 보호한다.

(q1.5.4.2.2.2) 두 가지 점에서 사적인 보호 협회는 최소 국가와는 다르다고, 즉 국가의 최소 개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될 가능성이 있다. (1) 그 협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듯하며, (2) 그 영역 안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45)

1.5.4.2.2.1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보호 범위

(q1.5.4.2.2.1.1) [지배적인 보호협회] 아래서는(개평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곤) 보호를 위해 수수료를 내는 사람만이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등급별로 보호라는 상품을 살 수 있다. 외적 경제적 요인을 제외하면, 누구도 자신이 원하기 전에는 타인의 보호를 위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누구도 타인을 위해 보호라는 상품을 사거나 이를 사기 위해 기부토록 요구받지 않는다. 음식이나 의류와 같은 중요한 재화가 그러하듯이 사람들의 권리의 보호나 이의 행사는 시장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으로 취급된다.(47-48)

1.5.4.2.2.2 국가의 보호 범위

(q1.5.4.2.2.2.1) 통상적인 국가 개념에 따르면, 국가의 지리적 경계 안(또는 심지어 가끔 밖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보호를 받거나 적어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私人이 그러한 보호를 위한 (형사들에게 봉급을 지불하고, 경찰들로 하여 범인을 감금하고, 법정에 서게 하고, 징역을 살게 만들도록 봉급을 지불하기 위한) 비용을 치를 충분한 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또는 국가가 이러한 비용들을 치르는 대신 어떤 봉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는 재분배적(redistributive)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국가는 일부 사람들이 보다 많이 지불하여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보호받게 하는 국가이다. 그리고 주류의 정치 이론가들에 의해 진지하게 논의된 극도의 최소 국가, 즉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이론에서 운위되는 야정국가는 이런 식으로 재분배적인 것처럼 보인다.(48)

1.6 극소 국가

(e1.6.1) 노직의 국가 발전 단계에 따르면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극소 국가로 이행해 간다. 이 극소 국가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야정국가와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중간에 있는 사회 조직이다. 이 극소 국가는 권력의 독점은 주장한다. 따라서 극소 국가는 사적인 보복과 보상에 대한 행사를 금지한다. 그러나 자신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보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개인들은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q1.6.2) 고전적 자유주의적 이론에서 말하는 야정국가 - 모든 시민들을 폭력,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과, 계약을 이행케 하는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 는 재분배적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사적 보호 협회와 이 야정국가 사이의 중간적 사회 조직을 적어도 하나 상상할 수 있다. 야정국가는 종종 최소 국가라 불리므로, 이 중간의 조직을 우리는 극소 국가(ultramiminal state)라 부르겠다. 극소 국가는 직접적인

자기 방어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력의 사용에 있어 독점권을 보유한다. 그래서 이는 불의에 대한 사적인 보복과 보상의 징수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보호 및 집행 보험 증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만 보호와 집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49)

1.6.1 극소국가의 발생

(e1.6.1.1)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회원이 될 필요가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고 처벌할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는 자기애와 복수심에 의해 분별력을 상실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연법의 수준 이상으로 처벌하려고 할 수 있다. 고객들의 권리가 침해 될 위험이 있다면,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이런 사적 권리 행사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고객을 위해 사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하려할 것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합리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위협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자신의 고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이런 물리력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지배적인 보호 협회에 증명할 수 없다면,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공표할 권한을 가질 것처럼 보인다. 이 단계에서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대행사가 존재하게 된다. 이 대행사는 자신의 고객에 편에 서선 유일한 권력 사용자이며,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권력의 유일한 권위자이다. 지배적인 보호 협회를 넘어서, 국가의 존립에 핵심적이라고 말하는 두 가지 특징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적인 조직체인 다섯 번째 단계에 도달하였다. 정당한 권력의 독점적 행사.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극소 국가에 도달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노직은 주장한다.

1.6.2 극소 국가의 특징

(e1.6.2.1) 극소 국가의 특징은 지배적인 보호 협회와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야경국가의 중간적 사회 조직이다. 즉 극소 국가는 아직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두 조건인 권력의 독점과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제공이다. 그러나 극소 국가는 이 두 조건 중 하나만을 충족시키고 있다. 즉, 권력의 독점은 주장하지만,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q1.6.2.2) 우리는 사적 보호 협회와 이 야경국가 사이의 중간적 사회 조직을 적어도 하나 상상할 수 있다. 야경국가는 종종 최소 국가라 불리므로, 이 중간의 조직을 우리는 극소 국가(ultramiminal state)라 부를 것이다. 극소 국가는 직접적인 자기 방어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력의 사용에 있어 독점권을 보유한다. 그래서 이는 불의에 대한 사적인 보복과 보상의 징수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보호 및 집행 보험 증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만 보호와 집행을 서비스로 제공한다. 보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49)

1.6.3 극소 국가와 국가의 차이점

(e1.6.3.1) 노직은 국가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보호 협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보호 협회의 회원들에 대한 권리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협회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은 처벌하겠다고 공헌할 수 있다. 이때의 보호 협회는 힘의 사용 권한의 독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협회 소속원에 대한 힘의 독점적 사용을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속원을 위하여 소속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힘의 독점적 사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국가 성립의 요건 중 한 가지인 강제력의 독점을 갖추게 된다. 노직은 이러한 지배적인 보호 협

회를 극소 국가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극소 국가는 힘의 독점이라는 측면에서는 국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자신의 관할 내에 있는 독립인들에 대한 보호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극소 국가는 국가의 성립 요건 중 두 번째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한다.

1.7 최소국가

(e1.7.1) 노직이 말하는 최소 국가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야경국가를 의미한다. 이 최소 국가는 야경국가에서처럼 기능을 제한적으로 갖게 되는 데, 폭력,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과 계약을 이행케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노직에 의하면, 최소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최소국가의 기능을 넘어서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q1.7.2) 고전적 자유주의적 이론에서 말하는 야경국가 - 모든 시민들을 폭력,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과, 계약을 이행케 하는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 는 재분배적인 것처럼 보인다.(49)

1.7.1 최소국가의 특징

(q1.7.1.1) 최소 국가는 극소 국가에, 조세 수입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명백히 재분배적인 프리드먼(Friedman)의 보증서 제도가 덧붙여진 국가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나 일부의 사람들(예를 들면, 곤궁에 빠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통해 마련된 보증서가 주어지며, 이 증서는 그들이 극소 국가로부터 보호 보험 증권을 구입할 때만 사용될 수 있다.(49)

1.7.2 최소국가의 재분배적 특징

(e1.7.2.1)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처벌할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배적인 대행사는, 그가 이런 권리를 남용했을 때 가쳐올 피해의 위험 때문에, 그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배적인 대행사가 그의 자연권 행사를 금지한다면, 지배적인 대행사는 이에 대해 그에게 보상해 주어야만 한다고 노직은 주장한다.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보상은 그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극소국가가 권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극소 국가는 국가, 즉 최소 국가가 된다. 자신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직이 말하는 국가가 가진 두 번째 핵심적인 특징이다.

(q1.7.2.2) 야경 국가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타인들의 보호를 위해 돈을 지불하라고 강요하는 한에서 재분배적이므로, 이의 지지자들은 왜 이 국가의 재분배적 기능이 특유한 것인지 설명해야만 한다. 만약 어떤 유의 배분배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이라면, 왜 재분배는 매력적이고 바람직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합법적이지 아닌가?(49-50)

(e1.7.2.3) 최소국가가 모든 사람을 보호한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될 보호 서비스를 위하여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국가도 재분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모든 사람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최소 국가가 재분배적 활동 — 타인에 제공될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 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의 배후에 있는 이유는 재분배적인 것이 아니다. 즉 최소국가는 타인이 보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의거해서 타인의 보호 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타인이 자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보상해야만 한다. 그리고 가장 편리한 보상 방식은 이들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분배를 위한 이유는 복지나 평등에 대한 고려에 근거해 있

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자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자연권에 대한 고려에 근거해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최소국가의 재분배적 기능이 정당화되는 이유이다.

1.7.3 최소국가에서 인정되는 국가의 기능

(e1.7.3.1) 노직은 국가가 폭력, 사기 그리고 도둑, 계약 불이행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한에서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이런 시민의 권리 보호만이 유일한 국가의 정당화이다. 만약 국가가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시도한다면, 이런 정책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며, 이런 국가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노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최소국가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기능은 시민의 권리 보호에 국한된다.

(q1.7.3.2) 최소국가론자는 [...] 권리의 침해로부터의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이를 국가의 유일한 합법적 기능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모든 기능들은, 그들 자체가 권리의 침해를 포함하므로 불법이라 규정한다.(50)

1.7.4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의 국가 거부 이유

(q1.7.4.1) 국가가 한 지역 안에서의 힘의 사용을 독점하고 이 독점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처벌할 때, 그리고 국가가 일부 사람들에게 타인들을 위해 보호를 구매하라 강요함으로써 모두에게 보호를 제공할 때, 그 국가는 개인들의 처우에 관한 도덕적 측면 제약 사항들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론짓기를, 국가는 그 자체 본래적으로 비도덕적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어떤 상황하에선 합법적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비공격적 개인들이 이 침해에 대한 응수로서 사적으로 정의를 집행하려 할 때 이를 금지할 권리를, 국가는 어떤 근거에서 가로챌 수 있는가? [...] 만약 사적

집행자가 그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의 행위들 때문에 그를 처벌함은, 그의 권리를 침해함이며 따라서 도덕적 측면 제약 사항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권력의 사용을 독점함은, 이 견해에 따르면, 국가의 강제적인 과세 제도를 통한 재분배와 마찬가지로 비도덕적이다. 그 자신의 일이나 돌보는 평화로운 개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을 위해 무엇을 구매하지 않음은 그 사람의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논변은 계속 주장하기를, 국가가 한 사람에게 위협하여 그가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기부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국가는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인이 했더라면 개인의 권리의 침해였을 것을 가지고 개인을 위협함으로써, 국가는 도덕적 제약 사항들을 위반한다.(79-80)

1.7.5 사적인 정의 집행의 금지

(e1.7.5.1) 지배적인 보호 협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자립인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자립인의 사적인 정의 집행을 금지하려 할 수 있다. 자립인의 사적인 정의 집행은 너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한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 공포를 낳게 된다. 자립인의 위험한 사적인 정의 집행을 인정하게 된다면, 지배적인 보호 협회 일원들은 가입을 꺼려하게 될 것이고, 자립인들의 사적인 정의 집행을 금지하고 있는 보호 협회로 이동해 갈 것이다. 따라서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사적인 정의 집행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q1.7.5.2) 자립인은 사적인 정의 집행을 금지당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의 집행 절차가 너무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 즉 이는 무죄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죄 있는 자라도 과도히 처벌할 위험성이 다른 절차에 비해 높다 — 이거나, 또는 그의 절차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118)

1.7.5.1 사적 정의 집행의 절차에 의한 위험 빈도가 높은 경우

(q1.7.5.1.1) 자립인의 절차가 매우 믿을 수 없고 타인에게 높은 위험을 지운다면, 그리고 자주 그러하다면, 그는 모두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누구라도 자기 방어로서 그가 그런 고도의 모험적인 행위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118)

1.7.5.2 사적 정의 집행의 절차에 의한 위험 빈도가 낮은 경우

(e1.7.5.2.1) 자립인이 항상 위협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간헐적으로만 위협이 되는 경우, 이 자립인 때문에 사회에 일반적인 두려움이 형성되고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행위에 대한 금지는 광범위한 두려움과 걱정을 초래한다는 근거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자립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들의 위협이 매우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수가 많아서 두려움에 휩싸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일 것이다.

(q1.7.5.2.2) 자립인이 항존적 위협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믿을 수 없는 절차는 사용 못하게 저질 될 수 있다. 가령 그가 아주 믿을 수 없는 절차를 단지 10년에 한 번씩만 사용해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할 것임이 알려졌다를 경우, 이는 사회 내에 일반적인 두려움과 걱정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절차의 매우 간헐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근거는, 그러므로 없을 수도 있는 어떤 광범위한 그리고 보상 없는 두려움과 걱정의 초래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118)

1.7.5.2.1 위협의 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험적인 행위 상호 제한

(q1.7.5.2.1.1) 부당하게 처벌할 자립인이 많은 경우, 그 확률의 총량은 위험한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집단을 형성해 그러한 행위의 전체성을 금지할 권리가 있는가? 그러나 어떻게 이 금지는 시행될까?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는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들의 각각을 금지해야 하는가? 자연 상태에서 어떤 절차에 의거해 그들은 전체

성의 어떤 것이 지속될지를 결정하며, 무엇이 이들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하나? [...] 개인들의 결합체는 이 권리를 소유한다. 그러나 어느 개인의 권리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어느 사람이나 집단도 전체에서 누가 계속하도록 허락될지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 자립인들 모두가 집단을 형성해 이를 결정할 수는 있다. 가령, 그들은 어떤 절차를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사적 집행을 지속할 권리들 중 몇 개의 권리들을 따로 떼놓아 위험의 총량을 위험선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다.(119)

1.7.5.2.2 무임승차의 문제

(q1.7.5.2.2.1) 그들은 어떤 절차를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사적 집행을 지속할 권리들 중 몇 개의 권리들을 따로 떼놓아 위험의 총량을 위험선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다. 문제점은, 많은 수의 자립인들이 이를 행하면, 한 개인으로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험적인 행위를 상호 제한하여 그의 행위를 포함한 행위들의 전체성을 위험선 이하로 낮출 때, 자신이 선택하는 대로 모험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들은 위험의 경계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멀리 떼어놓아, 그가 끼어 들어올 여지를 남겨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른 사람들이 위험선 가까이 머물러 그의 행위에 끼어들음으로 해서 행위의 전체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설지라도, 바로 그의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뻔할 근거는 무엇인가?(119)

1.7.5.3 사적인 정의 집행을 금지하는 대가로서 보상

1.7.5.3.1 특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충분조건

(q1.7.3.1.1) 한 체계가 한 개인에게 어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 개인이 그 행위를 행함에 대해 그 체계는 그 개인으로부터 그 행위의 희생자를 위한 보상은 받아내고, 덧붙여 그 개인에게 벌금을 과한다. A가 한 개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물이 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그 개인을, 손실을 입지 않았을 당시의 상태보다는 나쁘지 않은 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C가 Y의 행위 A에 대한 X에

의 보상이 될 충분조건은, Y가 A를 한 후 X가 C를 받음으로 해서 있게 된 상태가 더 나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86)

1.7.5.3.2 자발적 동의에 의한 권리 침해

(q1.7.5.3.2.1) 한 사람은 그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행해졌다면 자신의 경계 침범일 그러한 것들을, 그 스스로 하길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여 그에게 이런 것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발적인 동의는, 국경을 열어 월경을 가능케 한다. 로크는, 물론, 그대가 허락하더라도, 타인이 그대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즉 이들은 그대 자신마저도 스스로에게 할 권리가 없는 것들이다. 로크는 그대가 허락한다 해서 타인이 그대를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자살할 권리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비부권주의적 입장을 취하는데, 이에 따르면 그가 어떤 것을 하거나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의무를 제3자에게 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무엇이나 우리 자신에게 행할 수 있다.(86)

1.7.5.3.3 보상이 있음에도 사적인 정의 집행을 금지하는 이유

(q1.7.5.3.3.1) 한 행위의 희생자가 보상을 받는다는 단서가 있는데, 왜 그 행위가 허락되기 보다는 금지되는가? [...] 이 질문은 너무 광범위하다. 보상을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행위 A를 허락하는 체계는, A를 수행하고선 보상은 지불치 않는 행위만은 적어도 금지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좁히기 위해, 부과된 보상액을 징수할 손쉬운 방법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누가 보상액을 물어야 하는지만 안다면 이의 징수는 쉽다. 그러나 종종 타인의 보호된 구역을 침범하고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도망간다. 단지 피해자를 위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범인의 발견, 체포, 유죄의 결정)만으로는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저지하기엔 불충분할 것 같다. 범죄자는 끊임없이 빠져나가 보상을 치름이 없이 이익을 얻고자 하지 않을까? 물론 그가 잡혀 유죄의 판정을 받으면, 그를 수배하고, 체포하고, 법정에 올린 데 든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아마도 이 추가적 경비는 그를 저지하기에 충분한 것일지도 모른

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행함을 금지하고, 보상을 지불하기 거부하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남의 경계로 넘어선 사람들에게 벌금을 과하게 될 수도 있다.(86-87)

1.7.5.3.3.1 공포로 인한 사적인 정의 집행 금지

(q1.7.5.3.3.1.1) 보상될 수 있는 행위라도 어떤 경우 금지될 수가 있다. 보상될 수 있는 행위들 중 어떤 것은 두려움을 일으킨다.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보상받으리라는 것을 안다 해도 이 행위들을 두려워한다. Y가 어떤 사람의 집 앞에서 미끄러져 팔을 다쳐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2000달러의 배상을 받은 것을, X가 듣고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Y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은 행운이었어.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팔 한번 부러져도 괜찮지. 그 비용이면 충분히 치료 배움을 치를 수 있으니.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X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면, X는 이 제안에 즐거워하겠는가? 다음 달 나는 당신의 팔을 부러뜨리고 싶다. 만약 그런 경우 나는 너에게 2000달러를 보상금으로 지불하겠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는 너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겠다. X는 즐거워하는 대신 공포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며, 조그마한 소리에도 놀라 뛰고, 고통이 갑자기 그에게 내습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초조해하지 않을까? 피해자가 후에 보상을 받는다는 단서 아래 가해를 허용하는 체계는 폭력과 갑작스러운 공격과 상해를 두려워하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양산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폭행을 금지할 이유를 제공하는가? 폭행을 가하는 사람은 그의 피해자에게 그 폭행과 이의 결과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 피해자가 폭행을 기다리며 느끼는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도 보상해야하지 않을까? [...] 어떤 것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해진 데 대해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것임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피하기 위해 이들은 금지되며 처벌 대상이 된다. (93-94)

1.7.5.3.3.1.1 사적 불의와 공적 불의의 구분

(q1.7.5.3.3.1.1.1) 모든 종류의 월경 행위가 이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누가 나의 자동차를 다음 달 가져가고, 그 차와 그로 인해 야기된 모든 불편함에 대해 보상한다고 말할 때, 나는 초조해 하고 두려움에 떨며 한 달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적 불의와 공적 요소를 포함하는 불의를 구분할 한 근거를 마련해 준다. 사적 불의는 오직 불의를 당한 자만이 보상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적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적 불의는, 이 불의가 그들에게 행해질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의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는 가장 완벽한 보상 대책도 피해 받지 않은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해서까지 보상해 주진 않는다. 그러므로 대중들은 당연히 이런 종류의 월경 행위를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 행위는, 이 행위가 그들에게로 행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그들에게 일으키기 때문이다.(94-95)

1.7.5.3.3.1.2 불의가 인정되는 체계에서의 공포

(q1.7.5.3.3.1.2.1)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보상받은 후 노물을 받고 침묵을 지킨다면 이런 공포의 증대는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폭행의 행위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며, 따라서 그 행위가 그들에게 가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며, 해서 그들은 이전보다 더 공포에 질리진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나 이를 허락하는 체계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공포를 낳는다는 점이다. 불의에 관한 모든 보고가 통제될 때, 어떻게 그 불의가 일어날 확률을 계상할 수 있는가? 해서 이 상당히 인위적인 경우에서도, 한 체계가 어떤 불의의 행위가 일어나도록 용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때 그 체계 안에서 이 행위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것은 그의 직접적인 피해자뿐이 아니다. 널리 퍼지는 공포감은 이런 행위의 실제 발생 및 용인을 단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 문제로 남겨 두지 않는다.(95)

1.7.5.3.3.2 사적인 정의 집행을 항상 금지하지 않는 이유

(q1.7.5.3.3.2.1) 일반적 공포에 근거한 논변은, 보상이 주어질 것임이 알려 진다해도 공포를 야기하는 그러한 월경 행위들의 금지를 정당화한다. 다른 고려 사항들도 이런 결론에 귀착된다. 보상이 지불된다는 조건 하에 월경 행위를 허용하는 체계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케 한다. 그들이 그와 같이 사용됨을,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나 기대가 자의적으로 저버려질 수 있음을 앎은, 벌써 그 사람들에게 초래되는 비용이다. 어떤 손해는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보장될 수 있는 것들의 경우도, 가해자는 실제 보상의 지불이 그의 능력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고려 사항들은 자의적 교환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고려 사항들과 결합할 때, 이들은 공포감을 일으키지 않는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다른 월경 행위들의 금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가? [...]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월경 행위를 왜 모두 금지하지 않는가? (99) // 침범당한 편이 미리 동의하지 않은, 도덕적 경계선의 월경행위를 왜 모두 금지하지 않는가? 왜 대체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경계선을 넘도록 그 누구에게라도 허락하는가?(86)

1.7.5.3.3.2.1 사적인 정의 집행을 항상 금지하지 않는 이유로서 우발적 사건

(q1.7.5.3.3.2.1.1) 동의되지 않은 모든 침해 행위들의 처벌은 사람들의 생활에 상당량의 위험과 불안을 불어넣을 것이다. 사람들은, 최선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 결국 처벌받지 않을까 근심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처벌은 공정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100)

1.7.5.3.3.2.2 사적인 정의 집행을 항상 금지하지 않는 이유로서 사전 동의 취득의 어려움

(q1.7.5.3.3.2.2.1) 어떤 요소가 사전 동의의 취득을 방해하거나 불가

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가 피해자가 될지, 그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정확히 안다할지라도, 그와 연락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 각각의 경우에 행위를 위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전 교섭은 불가능하다. 다른 어떤 경우엔, 동의 취득을 위한 교섭이 불가능하진 않으나 대가가 비쌀 수 있다. 잠재적 피해자로 알려진 사람과 연락을 취할 순 있으나 그 연락이, 먼저 그에게 대뇌 수술을 하고서야, 또는 아프리카 정극 속에 들어가서야, 도는 침묵과 금욕의 선서를 하고서 들어간 6개월 간의 수도 생활을 단축케 하고서야 취해질 수 있다면, 그 연락은 매우 값비싼 대가이다. 또는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오직 모든 잠재적 피해자들을 큰 비용을 들여 조사한 연후에야 확인될 수도 있다. 보상이 지불된다는 조건 아래서 행해질 수 있게 허락될 수 있는 종류의 월권 행위는, 사전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그를 얻기 위한 교섭이 너무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것들이다.(100)

1.7.5.3.3.2.3 사전인 정의 집행을 항상 금지하지 않는 이유로서 그 행위의 유용성

(q1.7.5.3.3.2.3.1) 우리가 종종 보상 있는 월권 행위를 허용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짐작컨대 그 행위가 주는 큰 이익 때문이다. 그 행위는 행해져야만 하며, 그럴 가치가 있고, 그 값이 나온다는 점 등이 이익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은 사전 확인과 연각이 가능하긴 하나, 그 행위의 큰 이익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타당하다. 그런 동의되지 않은 행위들의 금지는, 교섭이 불가능한 경우에서와 같이, 그들이 주는 이익의 동기를 결과한다.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가능한 한 최소의 순익적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사전 행위에 이르는 비용이 조금이라도 사후 보상 절차를 위한 비용보다 큰 경우, 누구에게도 공포를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사전 합의 없이도 수행할 수 있게 허락한다. (101)

1.7.6 보상의 원리

(e1.7.6.1) 노직은 극소 국가가 권리 침해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주장을 증명해야만 한다. 노직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지배적인 보호 협회가 독립인이 다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는 논변을 제시한다. 이렇게 하여 권력의 독점을 획득한 것이 극소 국가이다. 그러나 독립인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보상해 주어야만 한다. 즉 독립인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에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최소 국가가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노직은 ‘보상의 원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보상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당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게 위하여 그에게 강요된 불이익에 대해 보상받아야만 한다.’ 누군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자신의 위험한 행위를 금지 당함으로써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그는 보상받아야 한다.

(q1.7.6.2) 보상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타인을 해할 단지 개연적 가능성만을 지닌 행위를 금지 당함으로써 불리한 처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안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신들에게 떠 맡겨진 그 불리한 사항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112)

1.7.6.1 간질병 환자의 운전 금지에 대한 보상의 원리 적용

(e1.7.6.1.1) 노직은 하나의 활동을 특정한 어떤 사람이 한다면 그 행동이 특별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주어져야 한다. 노직은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원하는 간질병 환자의 예를 든다. 우리는 부가적인 위험 때문에 단순히 이들의 행위 실천을 금지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에 의존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자동차 운전을 못하게 금지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런 불이익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즉 운전수를 고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따라서 간질병 환자에게 그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q1.7.6.1.2) 한 위험한 행위가 실제로는 다른 누구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데도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들의 행동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가령 간질병 환자는 누구를 해함이 없이 평생 운전을 할 수도 있다. 그에게 운전을 금지한다 해서 실제로 타인에 대한 해가 줄진 않을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자동차 의존적인 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운전을 금함은 그 사람을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게 한다. 이 불리한 입장을 바꾸는 데는 돈이 든다. 운전사를 고용한다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의.(107-108)

1.7.6.2 러시아 룰렛 게임 금지에 대한 보상의 원리 적용

(q1.7.6.2.1) 한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에게 초래된 불이익에 대해 그는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는 주장을 고려해 보자. 자신들에 대한 위험의 감소로 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은 제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물을 너무 넓게 던진 감이 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놓고 러시아 룰렛을 하는 것을 내가 자기 방어로서 저지할 때, 나는 진정 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에 매우 위험하나 효율적인 방법을 쓰려 할 때, 그의 공장 근처에 사는 이웃들이 그로 하여금 그런 위험한 방법을 쓰지 못하게 했다 해서 그에게 초래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가? 분명 그렇지 않다.(108)

1.7.6.3 보상 원리의 타당한 적용

(q1.7.6.3.1) 타당한 보상의 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권리 주장이 커버하는 부류의 행위를 결정해야만 하겠다. 어떤 유형의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며, 사람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한 사람에게 금지될 경우 이는 그 사람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한다. 우리는 다음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유형의 한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줄지 모르며 한 사람이 이를 행하면 매우 위험한 것이므로 금지될 때, 그 자신들을 위해 강화된 안전성을 취하기 위해 그 행위를 금한 사람들은,

그 금지된 사람에게 그에게 초래된 불리점에 대해 보장해야만 한다. 이 원리의 의도는 간질병 환자의 운전 금지는 커버하나, 본의 아닌 러시아 롤렛이나 그 특수한 제조 방식의 경우는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이유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중요한 행위들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는 반면, 러시아 롤렛이라든가 특별히 위험한 제조 공정을 사용함은 일상인의 정상적인 생활의 일부가 아니다.(110-111)

1.7.6.4 보상 원리에 대한 반론

(e1.7.6.4.1) 보상의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원리 자체가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그리고 이 원리가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노직은 이것이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당신이 특정한 위험한 활동을 금지할 권리를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반론에 직면할 수 있다. 당신이 그 권리를 가졌다면, 당신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보상의 원리가 설 자리가 없다.

(q1.7.6.4.2) 보상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위험한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 금지될 때, 그 사람은 보상받아야만 한다.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대는 다른 사람의 위험한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거나 없거나 이다. 만약 있다면, 그대는 그대가 할 권리가 있는 것을 그에게 했으므로 그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 만약 없다면, 그대는 월권적인 금지 행위를 행하고 그에 대해 보상책을 마련하려는 대신, 그 월권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그 어느 경우에도 금지한 후 이 금지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적합한 사리가 아닌 듯싶다.(112-113)

1.7.6.4.1 보상 원리에 제기되는 반론에 대한 노직의 답변

(q1.7.6.4.1.1) 그대는 금지할 권리가 있으므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 또는 그대는 금지할 권리가 없으므로 금지 행위를 그치라는 식의 딜레마는 너무 간단하다. 진실은 그대가 한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가졌으며, 이

권리는 그 행위가 금지된 사람들에게 그대가 보상을 한다는 단서 하에서 그 권리가 주어지는 것일 수 있다. [...] 계약 곡선 위의 인정될 수 있는 지점 중 어느 것이 선택돼야 할지는 관여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문제라고 우리는 말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사후의 충분 보상의 지불보다는 사전 교섭이 좋다. 현재 논의되는 하위 집합의 경우에는, 그러나 계약 곡선의 한 극단을 균일하게 선택함이 적절할 듯싶다. 쌍방이 이익을 얻고, 이 이익을 어떻게 균배할지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교환과는 달리, 타방을 해할 것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일방(A)이 삼가야 할지에 관한 교섭에서 A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전부가 충분 보상이다.(113)

1.7.7 절차적 권리

(e1.7.7.1) 모든 위험한 사례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러시아 룰렛 게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에 따른 모든 피해를 보상할 것을 제안했을 때조차도, 이런 위험한 게임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 침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차를 운전한다면,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시골길을 걸어 가면서조차도, 다른 사람의 토지로 우연히 들어가게 되면, 타인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실제로 모든 활동은 적은 양일지언정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듯이 보인다. 이런 경우에 야기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조건 하에 위험한 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 즉 지배적인 보호 협회는 정의의 사적 행사와 같은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자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상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연권의 관점에서 금지될 위험한 행위와 보상이 주어진다면 허용될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러시아 룰렛 게임자를, 또는 정의의 사적인 집행을 자동차 운전자, 시골길을 걷는 사람처럼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독립인으로 하여금 그의 위험한 활동

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직은 지배적인 대형 업소가 이런 정책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논변은 정의 집행과 관련된 논의에 독특한 새로운 개념인 절차적 권리 개념을 도입한다. 절차적 권리의 기초 이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정한 공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처벌받을 만하다는 단순한 가정에 의거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확립되거나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우리는 이런 증거가 공적으로 알려지고 조사하기에 유효한 절차, 즉 법정 안에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8 월경에 관한 인지적 원리

(e1.7.8.1) 대형 업소는 그런 위험을 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노직은 대형 업소가 그가 ‘월경에 관한 인지적 원리’라고 부르는 것을 채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 원리의 최종적인 견해는 ‘조건 C의 충족 없이 A를 행함이 Q의 권리를 침해함이라는 점을 어떤 사람이 안다면, C가 충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그는 A를 행할 수 없다.’(106-7)는 것이다. 그는 누구든 이런 금지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문맥을 살펴보면 노직은 ‘확인’을 ‘판단’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원리는 존 웨인이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에 따르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유용한 절차에 따를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죄를 평가할 수 있는 가능한 최고의 상황에 있지 않다면, 죄인을 처벌하는 것조차도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 논변은 절차적 권리를 가정하지 않고서도 절차적 권리를 가정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낳게 한다.

(q1.7.8.2) 우리는 다음의 월경에 관한 인지적 원리를 제안할 수 있겠

다. 만약 조건 C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A의 수행이 Q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러면 C가 충족됨을 알지 못한 자는 A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 경우 그를 처벌함이 그의 권리의 침해임을, 모두가 안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다음의 보다 약한 원리로 만족할 수 있다. 만약 조건 C의 충족 없이 A를 행함은 Q의 권리를 침해함이라는 점을 어떤 사람이 안다면, C가 충족됨을 알지 못할 경우 A를 행해선 안 된다. 보다 약하나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충분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조건 C의 충족 없이 A를 행함이 Q의 권리를 침해함이라는 점을 어떤 사람이 안다면, C가 충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그는 A를 행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이 금지 조항의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라도 위반자를 그렇게 처벌할 권리가 있다. 사람들은 그 자신이 금지 조항을 거스르지 않는 경우에만, 즉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이 이 금지 조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 확인한 경우에만 그러할 수 있다.(139-140)

2. 정의

(e2.1) 국가의 존립에 정당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믿든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믿든, 국가의 합법적 기능과 적절한 권한, 그리고 그 범위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은 재화와 수입을 분배함에 있어서 정의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직이 주장하는 최소 국가에 제기될 수 있는 하나의 문제점은 최소 국가가 이런 종류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최소국가에 대한 심각한 반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의로운 사회란 각자가 동일한 몫의 재화를 갖는 사회라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일은 우연히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분배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권위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적절한 기능이라고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즉각 최소 국가보다는 더 큰 국가를 성립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는 공격, 절도 그리고 사기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재화를 재분배 할 것이다. 얼핏 노직은 하나의 딜레마에 봉착하는 듯이 보인다. 즉 최소 국가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분배적 정의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분배적 정의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을 받아들이고서, 최소 국가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라는 생각을 포기할 것인가? 노직은, 흥미롭게도, 이런 딜레마를 피하는 세 번째 대안을 그 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직은 분배적 정의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데, 그 설명에 따르면 최소 국가에 의해서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이 정의의 소유 권리론의 역할이다.

2.1 분배적 정의

(e2.1.1) 정의 이론들은 분배적 정의의 문제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다룬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재화가 정당하게 분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노직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방법이 ‘중립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즉 분배적 정의에 관해 말하는 것은 중심적인 권위자에 의해 정당하게 할당되기를 기다리며 커다란 ‘사회라는 그릇’안에 재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그릇은 없다. 단지 사람들, 사람들의 연합체, 자연 세계, 그리고 사람들이 생산해 낸 것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재화의 생산과 이에 대한 적절한 분배를 분리해서 다룰 수 없다. 사람들이 획득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들이 생산한 것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들이 생산한 것은 거의 이들이 얻고자 기대한 것의 결과이다. 물론, 현재의 재산 소유 상태가 정당한가를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정의가 이 재화를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지를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배적 정의에 관해 계속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회라는 그릇’을 빌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와 다른 정의 이론들에는 모른 척 무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노직이 제시하는 이론을 빠뜨릴 수가 있다. 노직은 경제적 정의는 중앙 집권적 분배적 과정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최소 국가에 의해서도 경제적 정의가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히려 ‘분배적 정의’보다는 ‘소유에 있어서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한다. 소유 권리론은 정의 이론 중 하나이다. 이것은 소유에 있어서 정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q2.1.2) 분배적 정의란 용어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분배라는 어휘를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구 또는 기관이 물건들을 나누는데 어떤 기준 또는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각자의 몫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끼어들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할지는, 적어도 열려진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이미 서투르게나마 행한 것을 또다시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이제 부주의한 분할을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조정을 하는, 어떤 어른으로부터 파이 조각을 받아 쥔 어린 아이의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 중앙 분배,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나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각 개인이 갖는 바는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여 또는 선물로서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바이다. 자

유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자를 손에 쥐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교환과 행위로부터 발생한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배우자의 분배란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경우에도 몫의 분배 행위 또는 분배란 있을 수 없다. (191-192)

2.2 소유에 있어서 정의

(e2.2.1) 노직은 경제적 정의의 문제를 소유물에서의 정의라고 부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정의의 문제를 분배적 정의를 통해 다루지 않는 것은 이런 설명 방식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커다란 ‘사회라는 그릇’안에 재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노직이 말하는 소유에 있어서 정의는,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소유에 관한 세 가지 원리에 합치해야만 한다. 소유에 관한 세 가지 원리는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소유물에서의 불의의 교정이다. 각자가 이런 세 가지 원리에 합치하여 소유에 있어서 정당하다면, 각각의 개인이 소유한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

(q2.2.2)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이는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만약 각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 이 일반적인 개요를 세부적으로 이론화하기 위해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세 원리 각각의 세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 세 원리란 소유물 취득의 원리, 소유물 이전의 원리, 그리고 이 두 원리 위반을 교정하는 원리이다. (195-196)

2.2.1 현재 시간 단면원리(중국 상태 원리)

(e2.2.1.1) 현재 시간 단면 원리는 중국 결과적 원리 또는 중국 상태 원리에 속하는 하나의 원리이다. 말하자면 중국 결과적 원리 또는 중국 상태 원리의 특성을 보다 잘 보여 주는 원리가 현재 시간 단면 원리이다. 현재 시간 단면 원리는 소유의 결과적 집합의 구조만을 주목하며, 이 때문에 시간 단면 원리는 비역사적 원리이다. 노직은 모든 비역사적 원리를 중국 결과적 원리 또는 중국 상태 원리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도 소유의 결과적 집합의 구조만을 주목하는 현재 시간 단면 원리를 거부할 것이다.

(q2.2.1.2) 현재 시간 단면 원리에 따르면, 분배에 있어서의 정의는 정의로운 분배에 관한 어떤 구조적 원리에 의해 판단할 때 물자들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 현재 시간 단면 원리에 따르면 분배의 정의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유일한 것은 누가 무엇을 결국 갖게 되는가의 문제이다.(196)

2.2.1.1 현재 시간 단면 원리의 한 예로서 공리주의

(e2.2.1.1.1) 노직은 현재 시간 단면 원리 또는 중국 상태 원리로 공리주의가 한 예가 된다고 주장한다. 정의에 관한 이런 설명의 본질적 특성은 이들이 그 구조에만 관심을 가지고서 분배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의하게 되지 않고서도 하나의 제도를 다른 제도로 대체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가 10을 갖고 B가 5를 갖는 것은 A가 5를 갖고 B가 10을 갖는 것과 동일한 유용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분배를 선택하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것이며, 하나의 분배 방식에서 다른 분배 방식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분배 방식보다 특정한 하나의 분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부정의와 관련 없는 것이 될 것이다.

(q2.2.1.1.2)공리주의자는 두 분배 상태를 비교함에 있어 어느 것이 보

다 큰 양의 유용성을 가지는지를 결정하고 만약 그 총량이 동일한 경우엔 보다 평등한 분배를 선택하는데, 이 선택을 위해 이 고정된 평등성의 기준을 적용하며, 이 점에서 공리주의자는 정의의 현재 시간 단면 원리를 지지할 것이다. 이는 마치 행복의 총량과 평등성의 총량 사이의 일정한 교역 계획표를 갖고 있는 자가 그러할 것과 같다.(196)

2.2.1.2 현재 시간 단면 원리의 한 예로서 복지 경제학

(q2.2.1.2.1) 복지 경제학은 정의에 관한 시간 단면의 원리를 채용한 이론이다. 주제는 분배에 관한 오직 현재의 정보만을 나타내는 매트릭스 위에서 동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몇몇의 통상적 조건(가령 분배의 선택은 매트릭스의 행들을 재명명함에도 불변한다는 등의) 뿐 아니라 이 점도 복지경제학이 그의 모든 부적절한 점들을 함께 가지며 현재 시간 단면 이론이 될 것을 보장한다.(197)

2.2.1.3 현재 시간 단면 원리의 문제점

(q2.2.1.3.1)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시간 단면 원리들이 분배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한 상황의 정의를 평가함에 있어 이 상황이 구현하고 있는 분배뿐 아니라 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함이 관계있다고 생각한다. 몇몇 사람들이 살인범이나 전범으로서 징역을 살 경우, 우리는 그 사회 내에서의 정의를 평가하기 위해 현재 시각에 이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등만을 살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가 무엇을 해서 처벌받아 마땅한지, 보다 적은 몫을 받아 마땅한지의 여부를 묻는 것은 한 사회 내의 정의 평가와 관계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칙과 벌금에 관한 추가적 정보의 유관성에 동의할 것이다. 욕구의 대상이 되는 것들도 살펴보자. 전통적 사회주의 입장 선 한 견해는, 노동자들은 생산품과 그들 노동의 성과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를 벌었다. 분배 행위가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소유 권리로 지니는 바의 것들을 주지 않으면 그 분배는 부당하다. 그 소유 권리는 어떤 과거 역사에 기반 한다.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어느 사회주의자도 다음과 같은 이방은 듣기 거북해 할 것

이다. 실제의 분배 상태A는 우연히 그가 원하는 바의 분배 상태 D와 구조적으로 일치하므로, A는 D에 못지않게 정의롭다. A의 D와의 차이점은 단지 자본의 기생충적인 소유자들은 A 아래서 노동자이 D에서 자신들이 받을 소유 권리를 소유하는 바를 받으며, 노동자는 A 아래서 자본가들이 D에서 받을 소유 권리가 있는바, 즉 아주 작은 몫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 사회주의자는 벌이, 생산, 소유 권리, 응분 등등의 개념을 고수하며 — 이런 고수는 내가 보기엔 타당하다 — 소유의 결과적 집합의 구조만을 주목하는 현재 시간 단면 원리를 거부한다. 사회주의자의 오류는 어떤 종류의 생산과정을 통해 어떤 소유 권리가 발생하느냐에 관한 그의 견해에 있다. (197-198)

2.2.2 분배의 역사적 원리

(e2.2.2.1) 노직은 역사적 원리를 두 부류로 구분한다. 즉 정형적 원리와 비정형적 원리로 구분한다. 정형적 이론은 정당한 분배는 몇몇 ‘자연적 특징’(natural dimension) 또는 총합 또는 특징의 배열(ordering of dimensions)에 의해 결정된다는, 즉 그들의 노동, 필요, 가치 등에 따라 분배된다는 이론이다. 노직은 ‘분배적 정의 이론의 임무가 “그의 — 에 따라 각자에게”에서 빈칸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정형을 찾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제안된 거의 모든 분배적 정의의 원리는 정형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노직은 자신의 역사적 소유 권리론은 정형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노직이 말하는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한 소유 권리의 원리들은 정의에 관한 역사적 원리이다. 즉 취득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전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사람, 즉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소유물을 취득한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원리는 소유 상태의 결과에 의해 그 소유의 정당성이 결정되지 않는다. 노직의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원리, 즉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 원리이다.

(q2.2.2.2) 분배에 있어 정의의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이다.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 [...] 정의의 역사적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한 분배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동일한 다른 분배 상태로 이동하더라도 후자가, 그 단면도에 있어선 전자와 동일함에도, 개인들의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침해하는 경우 불의가 저질러진다. 이는 실제의 역사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196-198)

2.2.2.1 정형적 원리

(e2.2.2.1.1) 정형적 이론은 정당한 분배는 몇몇 ‘자연적 특징’(natural dimension) 또는 총합 또는 특징의 배열(ordering of dimensions)에 의해 결정된다는, 즉 그들의 노동, 필요, 가치 등에 따라 분배된다는 이론이다. 노직은 ‘분배적 정의 이론의 임무가 “그의 — 에 따라 각자에게”에서 빈칸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정형을 찾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제안된 거의 모든 분배적 정의의 원리는 정형적이라고’ 주장한다.

(q2.2.2.1.2) 도덕적 공과 또는 상점에 따른 분배의 원리를 고려해 보자. 이 원리에 따르면 총체적 분배 분은 도덕적 공과에 정비례한다. 어느 누구도 도덕적 상점이 큰 사람보다 더 많은 몫을 가질 수 없다. 또는 위의 원리에서 도덕적 상점 대신에 사회에 대한 유용도란 기준을 대체하여 결과한 원리를 생각해 보라. 도덕적 상점에 따른 분배나 사회에 대한 유용도에 따른 분배 대신에 다른 차원의 것들의 무게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도덕적 상점, 사회에 대한 유용도와 필요도를 계측한 총합에 따른 분배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분배의 원리가 분배 상태로 하여금 어떤 자연적 차원, 자연적 차원들의 계측된 총합, 또는 자연적 차원들의 사전적 서열 배열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명시할 경우 그 원리를 정형적이라 부르자. 그리고 한 분배 상태가 정형적 원리에 부합할 경우 그 상태를 정형적이라 부르자.(199)

2.2.2.1.1 정형적인 분배

(q2.2.2.1.1.1) 도덕적 상점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인 역사적 원리이며, 이는 정형적인 분배 상태를 명시한다. IQ에 따른 분배 원리는 분배의 매트릭스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정보를 고려하는 정형적 원리이다. 하지만 이는 분배를 평가함에 있어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출하는 과거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이다. 이는 그의 행이 IQ 점수에 따라 분류된 분배적 매트릭스만을 요구한다. 하지만 한 사회에서의 분배는 그 자체는 단순히 정형적은 아니면서도, 위와 같은 단순히 정형적인 분배들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사회의 서로 다른 각 영역은 각각 다른 정형에 따라 분배하거나 또는 정형들의 어떤 조합이 사회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비례로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 소수의 정형적 분배로부터 이런 식으로 구성된 분배를 우리는 정형적이라 부르겠다. [...] 분배적 정의에 관해 제시된 거의 모든 원리들은 정형적이다. 이 모두는 각인에게 그의 도덕적 상점, 필요성, 한계 생산물, 그의 열성, 또는 이상 언급된 바들의 계측된 총합에 따라 분배하라고 요구한다.(199-200)

2.2.2.1.2 자유에 의한 정형의 파괴

(e2.2.2.1.2.1) 자발적인 이전이 어떤 정형을 뒤집고 새로운 분배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노직의 첫 번째 핵심은 자발적 교환이 정형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분배 D2는 정의로운가? 노직의 두 번째 주장은 이것이 정의롭다는 것이다. D1이 정의롭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D2로 변경하였다면, D2도 또한 정의로운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노직은 최초의 정형에 따르지 않지만 정의로운 분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정형화된 정의 개념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D2가 정의롭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발적 이전에 의해 위협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D1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정형화된 이론과 중국 상태 이론에 반대하는 노직의 세 번째 핵심이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

발적인 행동이 하나의 분배를 붕괴시킬 것이라면, 그 분배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자발적 행위를 금지하고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이 될 것이다. D1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형화를 위협하는 자유로운 거래를 금지할 수 있으며, 정형화를 본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재화를 재분배할 수도 있다. (노직이 물었듯이, 얼마나 자주 재분배해야만 하는가? 왜 즉각 몰수하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 경우에, 우리는 그 정형을 파괴한 결과나 앞으로 파괴되었을 때 나타날 효과를 찾아 밝혀서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직이 주장했듯이, 이것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 지속적으로 간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고도 받아들이 수 없는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q2.2.2.1.2.2) 소유 권리에 의거치 않는 견해들 중 하나에 의해 선호 되는 분배 상태가 실현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이 그대가 선호하는 상태라 가정하고, 이 상태를 D1이라 하자. 이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균등한 몫을 가질 수도 있고, 분배 몫은 그대가 귀히 여기는 어떤 차원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이제 챔벌린이 입장 수입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인기 선수여서 여러 농구팀들이 서로 스카우트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한 팀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매 홈 게임의 경우 매 입장권 가격에서 25센트가 그의 몫이다. 경기 시즌이 시작되어 사람들은 챔벌린이 속한 팀의 경기를 즐겁게 관전한다. 그들은 입장권을 사며 매번 입장료 중 25센트를 챔벌린의 이름이 붙어 있는 별도의 상자 속에 집어넣는다. 그들은 그의 경기를 흥분하며 구경한다. 이 구경은 입장료 전부를 그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한 시즌에 일백만 명의 관객이 그의 홈 게임을 관전하며 따라서 챔벌린은 미국인 평균 수입보다 훨씬 많을 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의 수입보다도 많은 금액인 25만 달러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가정하다. 그는 이 수입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가? 이 새로운 분배 상태 D2는 부정 의한가? 관객의 각각이 D1에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 분배 상태는 우리 논의의 목적을 위해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가정한 바의 것이기 때문이다. [...] 만약 D1이 정의로운 분배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D1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몫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D1에서 D2로 자발적으로 이행했다면 D2역시 정의롭지 않을까? 만약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 권리를 갖고 있는 바의 그 재산을 처

분할 소유 권리가 있다면, 이 권리는 이 재산을 챔벌린에게 줄, 또는 무엇과 교환할 권리도 포함하지 않는가? (205-206)

2.2.2.1.3 정형 파괴를 꺼려한다는 반론

(e2.2.2.1.3.1) 정형이 자발적 거래에 의해 분열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하나의 대답은 정형들이 단순히 제멋대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정형들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생겨나게 될 것이다. 여러 경우에서, 사람들은 이런 이유들에 마음이 움직여 그 정형을 유지하려고 애쓸 수 있다. 비록 이들이 관심의 부족이나 탐욕에 의해 이런 정형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안다할지라도 그러하다. 한 사회가 ‘화폐가 없는 사회주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래 동안 힘들여 싸워왔다고 생각해 보자. 개인들은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특정한 몫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들을 채택하기를 꺼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등을 파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2.2.2.1.3.1 정형 파괴를 꺼려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노직의 비판

(q2.2.2.1.3.1.1) 이것은 다음과 같은 비현실적인 전제를 하고 있다. 즉 (1) 모두가 그 정형을 유지하길 무엇보다도 원한다. [...] (2) 각자는 그 자신의 행동과 타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행위들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어떤 행위가 그 정형을 파괴시킬지 발견할 수 있다. (3) 그리고 광범위한 분야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조정하여 그 정형에 꼭 맞출 수 있다.(208)

2.2.2.1.3.2 정형 파괴를 꺼려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노직의 비판에 대한 검토

(e2.2.2.1.3.2.1) 노직이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말하는 모두가 그 정형을 유지하길 무엇보다도 원한다는 전제는 과연 비현실적인가? 또한 이 전제보다 약간 약한 견해, 즉 압도적인 다수가 정형을 유지하기를 전적

으로 원할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비현실적인가? 이런 주장과 이 주장에 대한 거부 주장은 인간 본성에 대한 개념에 의거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리고 노직이 모두가 그 정형을 유지하길 무엇보다도 원한다는 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직은 그 주장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물론, 노직은 자신이 여기서 증명의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역사적 증거들이 노직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하나의 정형을 유지하려는 데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강제하지 않아도 그 정형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가질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노직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는 개념을 확립해야하는 사람의 바로 노직의 반대자들이다. 각자는 그 자신의 행동과 타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행위들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어떤 행위가 그 정형을 파괴시킬지 발견할 수 있다는 전제와 광범위한 분야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조정하여 그 정형에 꼭 맞출 수 있다는 전제는 어떠한가? 이것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해져 왔다. ‘기껏해야 이것들은 [정형적] 정의를 완벽하게 실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정보의 결핍과 불완전한 조정이 정형에서 이탈하게 만들 때조차도, 이것들은 오래 동안 축적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비록 수많고 심각한 것이기는 하지만-탈선에 해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정형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갖는다면, 이들은 발생한 어긋남을 바로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직은 하나의 정형이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직은 단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가 D1이 올바른 정형인가라는 문제에서 분열된다면, D1은 그다지 오래 동안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2.2.2.1.4 과도한 이기주의에 의해 유지되는 분배적 정형

(q2.2.2.1.4.1) 의견상으로는 정형적 원리들은 사람들이 어떤 선호된 분배적 정형 D1하에서 그 소유 권리를 갖는 또는 나눠 받은 그 자산을 자기 자신을 위해,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함을 선택하게 허락한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 사람들의 각각이 자신의 D1에서의 자산의 일부를 다른 한 사람에게 쓰면, 그 다른 사람은 자신의 D1에서의 몫보다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고 하여 그 선호된 분배적 정형은 교란되기 때문이다. 한 분배적 정형의 유지 행위는 과도한 개인주의이다! 정형적 분배의 원리들은 소유 권리의 원리들이 주는 바의 것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 -단지 보다 나은 분배가 있길 바랄 뿐. 즉 그 원리들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바의 처분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으며, 타인의 지위 향상을 포함하는 목표를 추구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212)

2.2.2.2 비정형적 원리

(e2.2.2.2.1) 비정형적 역사적 이론은 적합한 분배 방식에 대한 하나의 정형을 상술하기 보다는 재산을 소유하게 된 방식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즉 이것은 재산 획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이행되어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나 그 과정 체계에 대한 상술이다. 즉 당신이 올바른 과정에 의해 재산을 소유했고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당신의 재산 소유는 정당하다. 비정형적 역사적 이론이 노직이 말하는 소유 권리론이다.

(q2.2.2.2.2) 소유 권리에 의거한 원리는 그러한 정형적이 아니다. 어느 자연적 차원이나 소수의 자연적 차원들의 계측된 총합이나 조합도 소유 권리에 의거한 원리에 따라 초래되는 그러한 분배 상태를 산출하지 않는다. 일부의 사람들이 그들의 한계 생산품을 받을 때, 도박에서 돈을 딸 때, 그들의 배우자의 수입의 일부를 받을 때, 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이자를 받을 때, 그들의 찬미자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바를 늘릴 때, 무엇을 발견할 때 등등의 경우 결과하는 소유물의 집합은 정형적이 아닐 것이다. 두터운 정형의 실가닥이 이 집합을 관통하고 있다. (200)

2.2.2.2.1 하이예크의 비정형적 입장

(q2.2.2.2.1.1) 하이예크의 저작은, 다른 학자들 보다 덜 자주, 분배적 정의의 정형화가 요구하는 바에 초점을 맞춘다. 하이예크는 각 개인의 도덕적 상점에 따라 각자에 분배하기에 충분할 만큼 각 개인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논한다. 그리고 그는 더 말하기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평등의 질서이건 불평등의 질서이건, 의도적으로 선택된 분배의 정형을 사회에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들이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하이예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도덕적 상점보다는 가치에 따른 분배, 즉 한 사람의 행위나 타인에 대한 봉사가 갖는 인지된 가치에 따른 분배가 존재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201)

2.2.2.2.2 소유 권리론

(q2.2.2.2.2.1)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주제는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소유물의 초초 취득, 즉 소유되지 않은 것들의 사유화이다. 이는 비점유물이 어떻게 점유될 수 있는지의 문제, 비점유물이 점유되게 되는 과정 또는 과정들, 이 과정을 통해 점유될 수 있는 물건들, 특정한 과정을 통해 점유될 수 있는 것의 범위 등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이 주제에 관한 복잡한 진리를 — 여기서는 정형화하여 표현하지 않겠지만 — 우리는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라 부르겠다. 두 번째 소주제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의 소유물의 이전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 물건들을 이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가? 이 주제 아래서 우리는 자발적 교환, 증여와 (다른 한편으로는) 사취, 그리고 한 사회에서 고정되어 있는 관습의 세부사항들을 논할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한 복잡한 진리(관습적 세부사항들은 생략하고)를 우리는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라 부르겠다.(192-193)

(q2.2.2.2.2.2) 세계가 전적으로 정의롭다면, 다음의 귀납적 정의가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주제를 모두 커버하리라.

1.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2.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한 소유물을,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3. 어느 누구도 1과 2의 (반복적) 적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193)

(q2.2.2.2.2.3) 모든 현실적 상황들이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두 원리, 즉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취하거나, 또는 그들을 노예화하거나, 그들의 생산물을 수탈하거나, 그들이 살고자 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교환에서의 자유 경쟁을 방해한다. 이런 행위들의 그 어느 것도 한 상황으로부터 다른 상황으로의 이행으로서는 허락될 수 없는 양태의 이행이다. 과거의 불의의 존재는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아래서의 세 번째 주요 주제를 제시한다. 즉 소유물에서의 불의의 교정. 만약 과거의 불의가 현재의 소유 상태를 여러 방식으로 – 어떤 것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확인할 수 없는 – 형성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불의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194-195)

2.2.2.2.2.1 취득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

(e2.2.2.2.2.1.1) 취득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는 사물이 소유되지 않은 것에서 소유된 것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노직은 유감스럽게도 취득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사유 재산의 정당화에 대한 물음을 계속해서 고찰했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직은 사유 재산에 대한 로크의 옹호를 고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로크의 취득에 관한 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노직의 생각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q2.2.2.2.2.1.2) 첫 번째는 소유물의 최초 취득, 즉 소유되지 않은 것들의 사유화이다. 이는 비점유물이 어떻게 점유될 수 있는지의 문제, 비

점유물이 점유되게 되는 과정 또는 과정들, 이 과정을 통해 점유될 수 있는 물건들, 특정의 과정을 통해 점유될 수 있는 것의 범위 등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이 주제에 관한 복잡한 진리를 — 여기서는 정형화하여 표현하지 않겠지만 — 우리는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라 부르겠다.(192)

2.2.2.2.2.2 취득에 관한 로크의 이론

(e2.2.2.2.2.1) 로크는 무소유주의 대상에 대한 재산권은, 누가 그것에 자신의 노동을 섞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로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 덕분에 재산을 갖게 되며, 자신의 노동을 어떤 것에 섞음으로써 그 대상을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충분하고도 많이’ 남겨 놓는다면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이 약탈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로크에 따르면, 대지의 열매와 대지 그 자체는 사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노직이 로크를 소개하고 있듯이,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즉 자신의 노동을 어떤 것에 ‘뒤 섞음’으로써 이전에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소유하게 된다. 이 논변은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 이것은 몇 가지 사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이유를 제공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것이 이미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 즉 사람들이 어떤 대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둘째, 이것은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신의 인격이나 육체에 대한 권리만큼 강력하게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 준다. 사적 재산에 대한 권리는 신체에 대한 권리, 즉 자신의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로크의 논변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노직이 로크를 이해하듯이 문자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 문제점은 노동을 어떤 것에 ‘섞는다는’ 이념에서 생겨나게 된다. 노직이 관심을 가지는 첫째 의문은 노동을 섞는 대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한 우주인이 화성에 사적으로 택지를 조성한 경우, 그는 소유자 없는 우주 전체에 자신의 노동을 가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특정한 부

분에 노동을 가한 것인가'라는 노직의 의문은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왔던 비판의 현대적인 버전이다.

(q2.2.2.2.2.2.2) 로크는 무소유주의 대상에 대한 재산권은, 누가 그것에 자신의 노동을 섞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견해는 많은 질문을 야기한다. 노동이 섞여질 수 있는 것들의 경계는 무엇인가? 한 우주인이 사인으로서 화성에 택지를 조성한 경우 그는 전 화성에 노동을 가한 것인가, 단지 우주의 거주자 없는 지역 전부인가, 아니면 단지 특정의 조그마한 터인가? 마지막의 경우, 행위 또는 노종은 어떤 터를 소유권에 귀속되게 하는가? 한 행위가 그 지역에서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최소한의 지역만을? 처녀지가 로크적 과정을 통해 소유권에 귀속될 수 있는가? 한 지역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행위는 짐작컨대, 울타리를 친 자를 그 울타리만의 소유주로 만들 것이다.(220-221)

2.2.2.2.2.2.1 소유와 무소유를 섞음으로서 기존 소유가 상실된다는 의문

(e2.2.2.2.2.2.1.1) 로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즉 노동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에 뒤섞는다면 나는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노직은 이것이 다른 것을 얻기 보다는 내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는 방식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이런 지적은 하나의 세련되고 재미있는 예를 만들어 낸다. '내가 한 깡통의 토마토 주스를 소유하고 있어 이것을 바다에 부어 그 입자들(내가 추적할 수 있도록 방사선이 쏘여진)이 바다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한다면, 나는 이 행위를 통해 바다를 소유하게 되는가? 아니면 어리석게도 토마토 주스를 허비한 것인가?

(q2.2.2.2.2.2.1.2) 한 사람이 무엇에 노동을 가하는 행위가 왜 그를 그 무엇의 소유주이게 하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람이 그 자신의 노동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가 소유한 것에 의해 침투된, 이전에 소유주가 없는 것이었던 것을 소유하게 하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소유권이 나머지에 스며들어 간다. 그러나 내가 소유한 바를 내가 소유하지 않은 바와 섞음이, 왜 내가 소유하지 않은 바의 취득이라기보다 내가 소유

한 바의 상실이 아닌가? 내가 한 깡통의 토마토 주스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바다에 부어 그 입자들이 바다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한다면, 나는 이 행위를 통해 바다를 소유하게 되는가, 아니면 어리석게도 나의 토마토 주스를 허비한 것인가?(221)

2.2.2.2.2.2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논변의 의문

(e2.2.2.2.2.2.1) 로크의 논변을 재구성하면서, 노직이 로크의 실제 견해를 바르게 나타내지 못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로크의 논변이 ‘당신이 소유한 것을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것에 섞는 것이 당신에게 무소유물에 자격을 부여한다’는 전제에 의거하고 있다면, 확실히 노직의 토마토 주스의 예는 로크의 논변을 반박한다. 그러나 로크의 논변이 이런 전제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로크가 호소하는 노동에 대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물론 하나의 특별한 특징은, 통상적인 과정에서, 당신의 노동을 어떤 것에 섞는다는 것은 그 사물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거나, 적어도 보다 더 유용하게 만든다. 로크는 실제로 이런 고려에 호소함으로써 재산 소유에 관한 자신의 정당화에 중요성을 두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노직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왜 소유 권리는 한 사람의 노동이 생산해 낸 부가 가치에 뿐만 아니라 대상 전체에 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가?

(q2.2.2.2.2.2.2) 아마도 로크의 아이디어는, 그게 아니라, 무엇에 노동을 가함이 그 무엇을 개선시키며 이를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신이 그의 가치를 창출한 바의 것은 누구나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떤 것은 노동을 가할 경우 그것이 덜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눈감아 두자. 왜 소유 권리는 한 사람의 노동이 생산해낸 부가 가치에 뿐 아니라 대상 전체에 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가?(221)

2.2.2.2.2.3 소유 권리를 갖기 위한 로크의 단서의 의미

(q2.2.2.2.2.3.1) 개선될 수 있는 무소유주의 사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면, 한 사물의 개선 행위는 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생각은 타당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물이 한 사람의 소유권에 귀속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상황도 변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그들은 그 사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타인의 상황의 변화는 꼭 그들 상황의 악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만약 내가 코니 아일랜드의 모래 한 톨을 사유화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한 톨의 모래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사유화할 수 있는 모래알들이 무수히 남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사유화한 모래알로 할 바의 것들은 타인의 위치를 향상시켜 그 모래알을 사용할 자유를 상실시킨 데 대한 보상을 할 수도 있다. 결정적인 요점은 무소유주의 사물의 사유화가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는지의 여부이다. 충분한 양의 그리고 똑같이 좋은 질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로크의 단서는 타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222)

2.2.2.2.2.3.1 로크적 단서의 문제점

(q2.2.2.2.2.3.1.1) 사람들은 이 단서가 과거에 타당한 적은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종종 주장한다. 그러나 이 단서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면, 이는 과거에 타당한 적도 없다. 충분한 양 그리고 동등한 질의 것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사유화하려는 사람 Z를 생각해 보자. 마지막으로 사유화한 사람 Y는 Z를, 이전에 Z가 소유했던바 사물에 행동을 가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는 없는 상태에 남겨 두었으며, 해서 Z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리하여 Y의 사유화는 로크의 단서에 따르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사유화한 사람 X는 Y를 보다 악화된 상황에 있게 했다. 그러므로 Y의 사유화도 허락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끝에서 세 번째로 사유화한 자 W는 사유화의 허락을 종식시켰으며, 이는 X의 위치를 악화시켰으므로, W의 사유화 역시 허락 가능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항구적 재산권을 사유화한 사람 A에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223)

2.2.2.2.2.3.2 약한 로크적 단서와 강한 로크적 단서

(q2.2.2.2.2.3.2.1)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유화에 의해 두 방식으로 그 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의 사유화에 의해 그는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요, 두 번째는 그가 이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다. 사유화에 의해 타인의 처지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요구 조건은 두 번째 뿐 아니라, 기회의 감소를 상쇄하는 바가 없으면 첫 번째도 배제할 것이다. 보다 약한 조건은 두 번째만을 배제할 것이다. 약한 조건이 요구될 경우, 우리는 위의 논변에서처럼 Z에서 A로 단숨에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Z는 더 이상 사유화할 순 없으나, 이전처럼 그가 사용할 것이 다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Y의 사유화는 약한 로크적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223)

2.2.2.2.2.3 이전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

(q2.2.2.2.2.3.1) 두 번째 소주제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의 소유물의 이전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 물건들을 이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가? 이 주제 아래서 우리는 자발적 교환, 증여와 사취, 그리고 한 사회에서 고정되어 있는 관습의 세부 사항들을 논할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한 복잡한 진리를 우리는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라 부르겠다. [...] 한 분배는, 이것이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 정의롭다. 한 분배 상태에서 다른 분배 상태로 이행하는 합법적인 수단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최초의 합법적인 이행은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정의로운 상황에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도 정의롭다.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된 변화의 수단은 정의를 보전한다. 추론의 올바른 규칙들이 진리치 보존적이며, 참인 전제로부터 이런 규칙들의 반복적인 적용을 통해 연역된 결론 그 자체도 참이듯이,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된바, 한 상황으로부터 다른 상황으로의 이행의 수단도 정의 보존적이며 원리에 전거하여 한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반족적인 이행 과정을 거쳐 실제로 발생하는 어떤 상황도 그 자

체 정의롭다. 정의 보존적 변형 과정과 진리 보존적 변형 과정 사이의 대비는 둘 사이의 유사한 관계뿐 아니라 상이한 관계도 드러낸다. 참인 전제로부터 진리치 보전적인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결론이 역역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 결론이 참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192-194)

2.2.2.2.2.4 교정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

(q2.2.2.2.2.4.1) 정의로운 상황이 정의 보전적인 방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상황의 정의로움을 보이기에 충분하지 않다. 도둑의 피해자가 그 도둑에게 절도물을 선물로 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은, 그 도둑에게 자신이 불법으로 취한, 물건에 대한 소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역사적이다. 이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의존한다. [...] 모든 현실적 상황들이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두 원리, 즉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취하거나, 또는 그들을 노예화하거나, 그들의 생산물을 수탈하거나, 그들이 살고자 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교환에서의 자유 경쟁을 방해한다. 이런 행위들의 그 어느 것도 한 상황으로부터 다른 상황으로의 이행으로서는 허락될 수 없는 양태의 이행이다. 과거의 불의의 존재는 소유물에서의 정의 아래서의 세 번째 주요 주제를 제시한다. 즉 소유물에서의 불의의 교정. (194)

2.2.2.2.2.4.1 불의의 교정과 관련한 여러 물음들

(e2.2.2.2.2.4.1.1) 과거의 불의가 현재의 소유 상태를 결과했다면, 현재의 소유 상태는 부정의하다. 이런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활동에는 여러 물음이 제기 될 수 있다. 노직은 이런 여러 물음들에 관해 길게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 놓을 뿐 이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 자기 스스로 이에 대한 이론적으로 철저하고 정교한 논리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q2.2.2.2.2.4.1.2) 만약 과거의 불의가 현재의 소유 상태를 여러 방

식으로 - 어떤 것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확인할 수 없는 - 형성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불의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불의가 저질러지기 전보다 그의 위치가 악화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불의의 행사자는 어떤 채무를 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의 위치가 악화된 자의 상황을 보상이 바로 지불되었었을 경우와 비교할 것인가? 수익자와 피해자가 불의의 행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가령 그 당사자들의 후에라면, 문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의 소유물이 그 자체, 시정되지 않는 불의에 근거하고 있을 경우에도 그에 대한 불의를 논할 수 있는가? 우리는 불의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어느 정도나 소급해야 하는가? 불의의 희생자가 자신들에게 대해 행해진 불의의 행위-행위를 포함한-를 시정하기 위해, 그들에게 허락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철저한 또는 이론적으로 정교한 논리를 알고 있지 않다.(194-195)

2.2.2.2.2.4.2 교정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의 함축 사항

(e2.2.2.2.2.4.2.1) 교정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철저하고 정교하게 논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교정의 원리를 산출하였다면, 그 교정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하나의 상황에서 불의가 저질러졌으며, 그 불의에 의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전반적인 불의에 관한 역사적 지식, 즉 저질러진 불의와 그 불의에 의해 영향 받은 현재의 소유 상태에 관한 기술, 둘째, 그 불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상황이 어떤 소유 상태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언적 지식이다.

(q2.2.2.2.2.4.2.2) 상당히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이론적인 탐구를 통해 교정의 원리를 산출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원리는 이전 상황과 그 상황에서 저질러진 불의에 관한 역사적 지식과 이 불의에 뒤따르는 사태의 현재까지의 추이 과정에 관한 역사적인 지식을 사용하며, 하여 한 사회 내에서의 소유 상태에 관한 기술을 제공한다. 교정의 원리는, 불의가 저질러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에 관한 최대한으로 정확한 가언적 지식을 사용할 것이다. 만약 소유의 현재적 상황이 그 원리에 따라 기술된 바와 다르다면, 그 원리에 의해 기술된 바가 실현되어야 한다. (195)

2.2.2.3 소득세 과세의 강제 노동적 성격

(q2.2.2.3.1)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주장이 명백한 진리라 생각한다. n시간분의 소득을 취하는 것은 그 노동자로부터 n시간 분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n시간 일하게 하는 것과 같다.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이 주장이 황당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심지어 이들도, 이들이 강제 노동에 반대한다면, 히피 실업자들로 하여금 곤궁한 자들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하는 데에는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5시간 분의 임금을 취하는 제도는, 5시간씩 일하게 강제하는 제도와 같은 것으로 그들에게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강제된 개인에게 명시된 특성의 노동을 강요하여 과세를 대체하는 경우보다, 다양한 행동의 선택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기본적 욕구에 필요한 양 이상의 모든 것에 대한 비례세와 같은 요소를 가진 제도를 구상한다. 이 경우 개인은 고정량의 가외의 시간을 강제로 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커버하기에 충분한 만큼만 벌음으로써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는 일부 개인들은 가외로 일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일부 사람들은 또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대안들이 상당한 정도로 더 나쁠 경우는 언제나 그들은 무엇을 하도록 강제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견해의 소지자로서는 위의 강제에 관한 견해는 전혀 의외의 것이다. 하지만 두 견해 모두 옳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금지하는 측면적 제약 사항을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개입하여 대안들을 제한 - 이 경우엔 세금의 납부나 또는 한계적 생존이라는 두 대안으로 제한 - 하려고 힘으로써 위협한다는 사실은, 과세를 강제 노동화하는 것이며, 이 사실은 과세를 강제 행위가 아닌바 제한된 선택의 다른 경우들로부터 구분한다.(214-215)

2.2.2.3.1 소득세 과세의 강제 노동적 성격에 대한 반대 견해

(q2.2.2.3.1.1)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이 주장이 황당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심지어 이들도, 이들이 강제 노동에 반대한다면, 히피 실업자들로 하여금 곤궁한 자들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하는 데에는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5시간 분의 임금을 취하는 제도는, 5시간씩 일하게 강제하

는 제도와 같은 것으로 그들에게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강제된 개인에게 명시된 특정의 노동을 강요하여 과세를 대체하는 경우보다, 다양한 행동의 선택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기본적 욕구에 필요한 양 이상의 모든 것에 대한 비례세와 같은 요소를 가진 제도를 구상한다. 이 경우 개인은 고정량의 가외의 시간을 강제로 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커버하기에 충분한 만큼만 벌음으로써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는 일부 개인들은 가외로 일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일부 사람들은 또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대안들이 상당한 정도로 더 나쁠 경우는 언제나 그들은 무엇을 하도록 강제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견해의 소지자들로서는 위의 강제에 관한 견해는 전혀 의외의 것이다.(214-215)

2.2.2.3.2 소득세 과세의 강제 노동적 성격에 대한 반대 견해에 대한 논박

(q2.2.2.3.2.1) 자신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것 이상의 수입을 벌기 위해 가외로 일하길 선택하는 사람은, 여가나 그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활동보다는 가외의 재화나 서비스를 선호한다. 반면 가외로 일하지 않길 선택한 사람은 가외로 일함으로써 그가 얻을 수 있는 가외의 재화나 서비스보다는 여가의 활동을 선호한다. 이런 경우, 세제가 한 사람의 여가의 일부를 취하여 곤궁한 자를 위해 원용(강제노동)함이 비합법적이라면, 세제가 한 사람의 재화의 일부를 취하여 그렇게 사용함은 어떻게 합법적일 수 있는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떤 물질적 재화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과, 자신의 선호나 욕망이 그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재화를 필요로 하진 않는 사람을 왜 우리는 달리 취급해야 하는가? 영화를 선호하는 (그래서 입장권 사기를 위해 가외로 일해야 하는) 사람은 곤궁한 자를 돕도록 소집되어야 하고, 노을의 관조를 선호하는 (그래서 가외의 돈을 벌 필요가 없는) 사람은 왜 그렇지 않은가? 재분배론자들은 가외의 노동 없이도 자신의 쾌락을 쉽사리 성취할 수 있는 자는 무시하길 선택하나, 반면 자신의 쾌락을 취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그 가련한 불운아들에게는 설상가상의 짐을 얹어 주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은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 그 역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왜 비물질적 비소비적

욕망의 소유자는 방해받지 않고 그가 원하는 바를 취할 수 있으나, 그의 쾌락이나 욕망이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해서 가외로 일해야 하는 사람은 그가 실현할 수 있는 것에 있어 제약되어야 하는가?(215-216)

참 고 문 헌

1. 노직.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 Jonathan Wolff, *Robert Nozick*, Stanford University Press.
3. 롤즈, 『정의론』, 이학사.
4. J. Paul(ed), *Reading Nozick*, Blackwell, Oxford.

『철학사상』 별책 2권

- 제1a호 철학의 주요 개념 1·2 / 백중현
- 제2호 『밀린다팡하』 / 서정형
- 제3호 데카르트 『방법서설』 / 윤선구
- 제4호 로크 『통치론』 / 정윤석
- 제5호 루소 『사회계약론』 / 진병운
- 제6호 칸트 『실천이성비판』 / 박정하
- 제7호 헤겔 『법철학』 / 강성화
- 제8호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 정원규
- 제9호 밀 『공리주의』 / 김영정 · 정원규
- 제10호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백승영
- 제11호 마르크스 『독일이데올로기』 / 손철성
- 제12호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 이선일
- 제13호 프레게 『산수의 기초』 / 최 훈
- 제14호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 박정일

『철학사상』 별책 3권

- 제1a호 『대학』 / 박성규
- 제2호 맹자 『맹자』 / 이해경
- 제3호 나가르주나 『중론』 / 서정형
- 제4호 조선전기 이기론 / 허남진
- 제5호 조선전기 수양론 / 정원재
- 제6호 조선전기 심성론 / 김영우
- 제7호 조선전기 경세론과 불교비판 / 강중기
- 제8호 플라톤 『국가』 / 김인곤
- 제9호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김남두 · 김재홍 · 강상진 · 이창우
- 제10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 박경숙
- 제11호 데카르트 『성찰』 / 윤선구
- 제12호 로크 『인간지성론』 / 김상현
- 제13호 라이프니츠 『단자론』 / 윤선구

- 제14호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진병운
 제15호 흄 『인설론』 / 장동익
 제16호 칸트 『순수이성비판』 / 김재호
 제17호 헤겔 『정신현상학』 / 강성화
 제18호 마르크스 『자본론』 / 손철성
 제19호 제임스 『실용주의』 / 정원규
 제20호 니체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 『유고(1888년 초-1889년 1월 초)』 / 백승영
 제21호 후설 『유럽학문의 위기』 / 정은혜
 제22호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 신상규
 제23호 하이데거 『언어로의 도상』 / 이선일
 제24호 쿤 『과학혁명의 구조』 / 박은진
 제25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 /
 최병일 · 이태수 · 심재룡 · 김영정

『철학사상』 별책 5권

- 제1호 공자 『논어』 / 박성규
 제2호 마명 『대승기신론』 / 서정형
 제3호 황종희 『명이대방록』 / 강중기
 제4호 플라톤 『향연』 / 김인곤
 제5호 흄 『인간지성에 관한 탐구』 / 윤선구
 제6호 칸트 『판단력비판』 / 김상현
 제7호 피히테 『전체 지식학의 기초』 / 김재호
 제8호 마르크스 『경제학-철학 수고』 / 강성화
 제9호 니체 『도덕의 계보』 / 백승영
 제10호 하이데거 『이정표』 / 이선일
 제11호 가다머 『진리와 방법』 1 / 정은혜
 제12호 군맨 『사실, 허구 그리고 예측』 / 김희정
 제13호 군맨 『세계제작의 방법들』 / 김희정
 제14호 롤즈 『정의론』 / 장동익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 24 호

발행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우)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http://philinst.snu.ac.kr
전 화	02) 880-6223
팩 스	02) 874-0126
인쇄일	2006년 5월 31일
발행일	2006년 6월 5일
출 판	도서출판 관악 02) 871-2118

